



2025. 7.

국회미래연구원 | 연구보고서 | 25-9호

인구감소시대 지역간 인구이동 패턴과 대응전략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연구진

민보경 연구위원

발 | 간 | 사

한국은 2020년 역사상 처음으로 출생아수가 사망자수 보다 적은 자연감소를 경험하며 인구감소시대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과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소멸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이동의 현황과 패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인구 이동의 주요 대상인 청년층을 중심으로 성별, 연령별 이동 패턴의 차이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맞춤형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분석 결과, 지역의 인구증감은 출산율보다는 인구 유출입의 사회적 증감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이 대학진학과 취업을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더 이른 시기부터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도 중·장년층의 유입이 증가하는 지역들이 확인되어, 지역의 인구 유입 전략을 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연령대별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구감소시대의 지역 발전은 단순히 인구 수의 증가만을 목표로 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 즉 청년층 정착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여건 개선, 그리고 활력 있는 중·장년층을 새로운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다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본 보고서가 인구감소시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7월

국회미래연구원장 김기식

요 약

1 서론

▶ 2020년 한국의 자연감소가 시작되면서 역사적 전환점 도래

- 생산인구 증가로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인구 보너스(bonus) 시대에서 생산인구 감소와 부양인구 증가를 특징으로 하는 인구 오퍼스(onus) 시대로 진입
 -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전국적 현상이지만,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욱 심각한 도전으로 작용
 - 2020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하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의 가속화 및 비수도권 일부 지역의 인구소멸 위험 현실화
- 인구이동 문제의 패러다임 전환
 - 과거에는 전체 인구 증가 상황에서 성장 과정에서의 불균형 문제로 인식되었으나 이제는 절대 인구 감소라는 새로운 현실 속에서 지역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핵심사안으로 이해되고 있음
 - 지역간 인구이동 문제는 단순한 인구 재배치 개념을 넘어 인구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됨
 - 지역 인구소멸의 위기는 저출생, 고령화, 수도권 집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종합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최근 한국의 지역간 인구이동 현상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지역 인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함

2 인구이동의 현황과 변화

▶ 전체 인구이동의 변화: 이동성 감소와 전입 사유 변화

- 2000년 이후 전국 인구이동의 총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시도간 이동과 시도 내 시군구간 이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서 일시적인 인구이동 증감이 확인되기도 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주택시장 침체 등 경제위기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됨
- 전입신고서에 기반한 이동사유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가족(33.4%)을 사유로 한 이동이 가장 많았으나 2024년에는 직업(29.4%)을 이유로 한 이동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10년 전에 비해 가족, 주택을 이유로 한 거주 이동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직업, 교육, 주거환경 등을 사유로 하는 이동의 비율은 증가하였음

요 약

▶ 연령별 인구이동의 변화: 청년층의 원거리 이동 증가

- 인구이동은 생애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생애주기별 이동 패턴의 차이가 나타남
 - 청소년기에는 이동성이 낮다가 20세 이후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이동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가족 형성기와 출산기에 최고점을 나타낸 후 점차 감소하는 패턴을 보임
 - 시도간 이동은 20-24세 청년층이 가장 활발하며, 시도 내 시군구간 이동은 30-34세 청년층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남
- 20대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원거리의 시도간 이동이 근거리의 시군구간 이동보다 활발하며 20-24세 청년들의 시도간 이동률은 10년 전에 비해 급격히 증가
 - 이는 생애주기 특성상 교육(대학 진학)과 직업(취업)을 사유로 한 타 시도로의 이동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수도권대학에 대한 선호와 대학 졸업 후 구직을 위한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많은 것으로 추정됨

▶ 지역별 인구분포: 수도권 중심의 인구 재편

- 최근 인구증감 변화를 살펴보면,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주로 수도권과 신도시 지역에 집중되었으며, 농촌 지역 및 구도심 지역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확인
 - 최근 5개년간 순유입이 큰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양주시 등으로, 이들 지역은 대기업 반도체 산업과 테크노밸리 등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과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이 동시에 이루어진 지역임
 - 최근 5개년간 경기도 부천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등은 순유출이 큰 지역인데 수도권 내에서도 산업구조 변화, 재개발, 교통망 등 인프라 여건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한 인구이동 패턴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 수도권 집중 현상: 경제적 격차의 심화
 - 전국 인구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비율을 비교한 결과,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 추월했으며 그 추세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 내 총생산(GRDP)은 2015년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추월한 후 그 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 단순히 인구의 양 뿐 아니라 각종 산업과 자산의 수도권 집중으로 질적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

요 약

3 지역 인구구조 변화

▶ 저출생: 지역별 합계출산율의 극명한 격차

- 2024년 시도별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전라남도(1.03), 세종특별자치시(1.0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특별시(0.58)가 가장 낮았음
 - 시군구별로는 전라남도 영광군(1.71)이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반면, 부산광역시 중구(0.30)가 가장 낮았음
 - 상위 5개 지역 중 3개 지역이 전라남도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하위 5개 지역 중 4개 지역이 서울특별시에 집중되어 대도시 지역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 확인

▶ 고령화: 지역별 고령인구 비율의 양극화

- 인구구조 측면에서 지역간 격차가 크게 나타남
 - 고령층(65세 이상)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10.9%)인 반면,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북도 의성군(47.5%)으로 약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임
 - 노년부양비도 경상북도 의성군(92.1)이 가장 높아 생산가능 인구 100명이 약 92명의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반면, 경기도 화성시(13.2)는 가장 낮아 지역별 부양 부담의 격심한 격차를 보여줌

▶ 20대 청년층의 수도권 전입: 직업이 최우선 이유

- 20대 청년은 취업과 경제활동을 통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강함
 - 서울특별시로 이동하는 20대의 전입사유는 직업(41.4%)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가족(17.2%), 교육(14.5%), 주택(14.4%) 순으로 나타남
 - 경기도로 이동하는 20대의 경우 직업(38.3%)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서울과 달리 가족(30.3%) 사유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는데, 이는 결혼이나 가족 형성 등의 생애주기 변화로 인해 경기도를 선택하는 20대가 많음을 시사함

요 약

4 지역 인구이동 이슈와 정책 방향

② 지역의 인구 유출을 완화하기 위한 거점 조성

- 지역 인구 변수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구규모가 작은 지역일수록 인구감소 폭이 크며, 지역의 인구증감은 자연증감보다는 인구유출입의 사회적 증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
 - 인구규모가 큰 대도시일수록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는 많지만 출산율은 낮다는 역설적 현상 발견
 - 지역의 인구 유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의 대도시와 거점도시 중심으로 인구담 역할을 하는 지역을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함

③ 청년의 계속 거주를 위한 정주여건 마련

- 작년 한 해 동안 비수도권 지역의 19-34세 청년의 수도권 전입은 충청남도가 16,1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광역시 15,240명, 경상남도 14,624명 순으로 나타났고, 전입사유로는 25-29세와 30-34세 청년층에서 직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19-24세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출 패턴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여성의 경우 19-24세에 대학진학과 취업을 위한 이동이 활발하고, 남성은 25-29세에 본격적인 사회진출과 취업을 위한 이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지역의 청년유출 완화를 위해 성별과 연령대를 고려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며,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 국회미래연구원의 2024년 국민 미래인식·가치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거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나이가 많을수록, 기혼자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오래 거주할수록 지역에 정착하려는 의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고학력자와 구직활동자는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이동하려는 경향이 강해 지역 차원에서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음
 - 사회적 네트워크의 규모와 안전감이 거주의를향을 높인다는 결과는 지역 공동체 강화와 안전한 환경 조성이 주민의 지역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줌
 - 청년층의 계속 거주의향이 전체 응답자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수도권으로 이주한 청년들조차 높은 주거비용과 삶의 질 측면의 한계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타 지역으로의 이주를 고려하고 있어, 청년들이 경제적 기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요 약

▶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년층 인구유입

- 인구감소지역은 청년 유출이 많은 지역이지만, 중·장년층(50-64세) 인구의 이동 패턴을 분석한 결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0월,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등 7개 지표를 활용하여 인구감소지수를 산출
 - 최근 5년간 인구감소지역 중 광역시 자치구에서는 인구 유출이 나타나고 있으나, 도 지역의 시·군에서는 대부분 꾸준한 중·장년층 인구 유입을 보이고 있어 인천광역시 강화군 (3,157명), 경기도 가평군(2,258명), 경상북도 영천시(2,911명) 등이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냄
 - 수도권 인근 지역은 도시의 편리함과 전원생활의 여유를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수도권 거주자들의 이주를 이끌고 있으며, 농지가 풍부한 내륙이나 해안가 지역들은 귀농·귀어를 희망하는 중·장년층의 새로운 정착지로 선택받고 있음
 - 평균 건강수명의 연장으로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건강상태, 교육수준, 경제적 여건이 모두 개선되어 새로운 노동시장 참여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연구에 따르면 55-60세 연령층의 83.5%가 평균 69.7세까지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게 활동적이고 경제력을 갖춘 중·장년층을 전략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각 지역은 고유한 기후, 지리적 위치,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자연환경 보전, 의료인프라 확충, 중·장년 친화적 시설 투자를 통해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함

요 약

5 결론

▶ 주요 연구 결과 및 시사점

- **지역 인구변화의 핵심은 자연적 증감보다 사회적 증감**
 - 지역의 인구증감은 합계출산율보다는 전출입 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역의 실질적인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인구 유입 촉진과 유출 방지에 초점을 둔 정책이 더욱 효과적임을 시사
- **청년층 수도권 유출을 완화하기 위한 지역에서의 안정적 정주 환경 조성**
 - 인구가동이 가장 활발한 청년층의 경우 대학진학과 취업이 주된 이동 동기로 작용하며, 특히 19-24세 연령층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수도권으로 더 많이 이주하는 경향이 나타남
 - 지역에서의 계속 거주 의향 분석 결과, 나이가 젊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거주 의향이 낮게 나타나 젊은 고학력자들의 지역 이탈 경향이 강함을 확인
 - 청년층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거점도시별로 특화된 분야에 대규모 인프라를 집중 투자하고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와 안전한 환경 조성이 중요하며, 물리적 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 필요
- **중·장년층 유입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활력 가능성 확인**
 -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역을 분석한 결과 청년층 유출이 발생하지만 중장년층의 유입이 증가하는 지역들이 확인되어, 청년인구 유입에만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연령대별 인구정책 수립과 고령인구를 지역경제의 적극적 소비자이자 잠재적 경제활동인구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요구됨
 - 인구감소시대의 지역 간 격차 해소는 단순한 인구 재분배 문제를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 통합을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핵심 과제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청년층 정착 지원과 중·장년층 유입 활용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음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제2장	인구이동 현황과 변화	7
	제1절 지역간 인구이동의 변화	9
	제2절 인구이동과 지역 특징	14
제3장	지역 인구구조 변화	21
	제1절 저출생과 고령화	23
	제2절 청년 인구이동	28
제4장	지역 인구이동 이슈와 정책방향	37
	제1절 인구감소와 관련된 지역 특성	39
	제2절 청년층 수도권으로의 이동	41
	제3절 지역맞춤형 인구 전략	45

목 차

인구감소시대 지역간 인구이동 패턴과 대응전략

제5장 결론	57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59
제2절 후속 연구방향	62
표/그림목차	63
참고문헌	67

제1장

서론

제1절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 연구 범위 및 방법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은 2020년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면서 역사적 전환점을 맞고 있다. 생산 인구 증가로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 시대에서 생산 인구 감소와 부양인구 증가를 특징으로 하는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로 진입하였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전국적 현상이지만, 그 영향은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더욱 심각한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2020년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했다는 것이다. 이후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화되고 있으며,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인구소멸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역소멸의 문제는 단순히 인구 감소를 넘어 저출생, 고령화, 수도권 쏠림이라는 복합적 요인이 중첩된 결과이다. 따라서 지역 차원의 개별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 전체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과거 인구정책은 주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지원 중심의 복지정책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구문제의 구조적 원인과 사회경제적 맥락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집중이라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지방소멸과 지역 불균형 문제가 인구정책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수도권에서의 인구 유출과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라는 인구이동 패턴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인구이동은 단순히 지역 간 인구 수의 증감이라는 제로섬(zero sum) 현상에 그치지 않는다. 특정 인구 집단의 선택적 이동은 지역 간 인구 구성의 질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지역의 경제적 활력, 혁신 역량,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역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이상림·최인선, 2023).

한국의 인구이동 문제는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성격과 의미가 근본적으로 달라져 왔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과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대규모 지역 간 인구이동이 시작되었다. 1970년대에는 농촌에서 도시로 향하는 전형적인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농업 중심 경제에서 공업 중심 경제로의 구조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인구 재배치였다. 1990년대에는 인구이동 패턴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 경제로 전환되면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과 금융업이 수도권에 집중되기 시작

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농촌-도시 이동에서 도시 간 이동으로 패턴이 전환되었으며, 특히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었다(이희연, 2024). 이러한 변화는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심화시키면서 국토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0년 한국의 총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인구이동 문제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이전까지는 전체 인구 증가 속에서 지역 간 인구 재배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절대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역 간 인구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사회 자체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과거 지역 간 인구이동이 주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균형 문제로 접근되었다면, 현재는 지역의 생존 자체가 걸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지역 발전 차원을 넘어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사안으로 부상했다.

이제 한국의 지역 간 인구이동 문제는 단순한 인구 재배치 개념을 넘어 ‘인구 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과거 수십 년 동안 한국이 경험해 온 인구이동과는 질적으로 다른 도전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은 단순히 정책적 차원의 변화를 넘어 한국 사회 전체가 직면한 새로운 현실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의미한다. 한국은 이제 인구 감소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미래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한국의 인구이동 현상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그 추세와 패턴을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지역 인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인구 감소 시대라는 새로운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의 인구이동 현상을 인구학적, 공간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동 패턴의 변화와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지역적 맥락에서의 과제와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지역의 인구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관련 정책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공간적 범위는 대한민국 전국을 대상으로 분석하되 통계분석과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을 활용한 공간분석을 위해서 시도 및 시군구 단위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현황,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국내 인구이동통계 등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시도, 시군구) 단위 분석을 실시한다. 주요 분석 자료인 국내 인구이동통계는 전입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주민등록상 인구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입신고서에 기재된 출발지(Origin)와 도착지(Destination) 정보뿐만 아니라 연령, 성별 등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 다차원적 분석이 가능하다.

시간적 범위로는 2000년대 이후 최근 20년간의 사회적 이동 추이를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특히 수도권 인구가 최초로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고, 국가 총인구의 감소가 시작된 2020년 이후의 인구이동 양상에 초점을 맞춘다. 2020년의 인구학적 전환은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며, 인구위기와 지방소멸에 대한 전(全) 사회적 우려와 정책적 논의를 촉발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의 인구이동 추세와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지역별, 이동흐름별 인구의 특성과 변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인구 불균형 완화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범위 및 방법을 다룬다. 제2장은 인구 이동의 흐름과 지역의 변화를 살펴본다. 제3장은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를 살펴보고자 인구 관련 주요 이슈인 저출생, 고령화와 함께 인구이동을 청년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관련 인구통계, 지역통계를 활용하여 시공간적 분포를 살펴봄으로써 지역간 인구구조의 특징을 비교한다. 제4장은 지역 소멸 이슈와 향후 정책방향을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연구의 요약과 후속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제2장

인구이동 현황과 변화

제1절 | 지역간 인구이동의 변화

제2절 | 인구이동과 지역 특징

제1절

지역간 인구이동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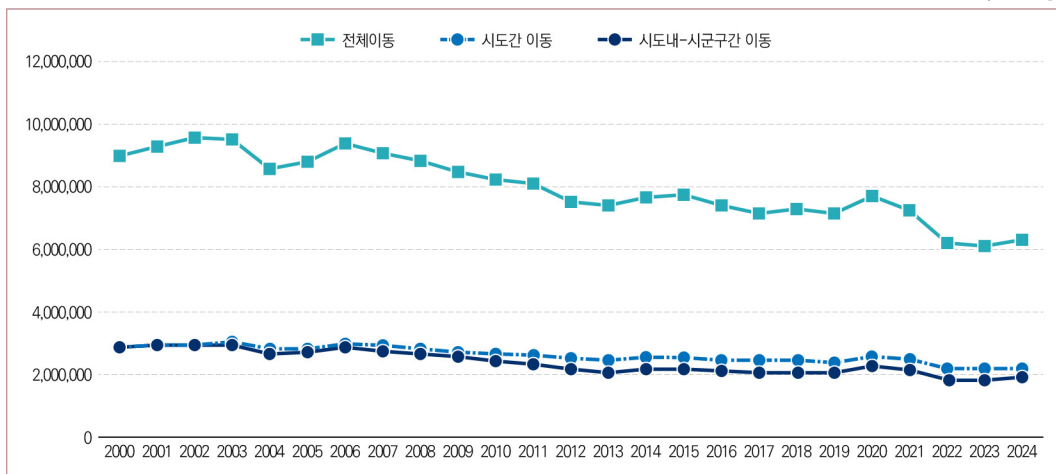
1. 전체 인구이동의 변화

우리나라의 2000년 이후 인구이동 자료를 살펴보면 이동성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 단위 인구이동의 총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시도간 이동, 시도 내 시군구간 이동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서 일시적으로 인구이동의 증가와 감소가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일시적인 인구이동 사례는 주로 경제위기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며, 예를 들면 카드대란이 있었던 2004년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3년 이후의 인구이동 증가, 2020년 이후 주택시장의 침체로 인한 인구이동의 감소 등이다(이상림·최인선, 2023).

그림 2-1 연도별 전국 이동규모 변화

(단위: 명)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KOSIS 검색일자: 2025.4.19.)

거주지 이동 사유를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통계를 활용하였다. 이 통계는 주민등록 전입 시 작성하는 전입신고서를 기반으로 하며, 이동자가 작성한 전입신고서는 전산망을 통해 중앙주민전산망센터에 보고된 후 월단위로 집계되어 국내인구이동통계로 작성된다(통계청,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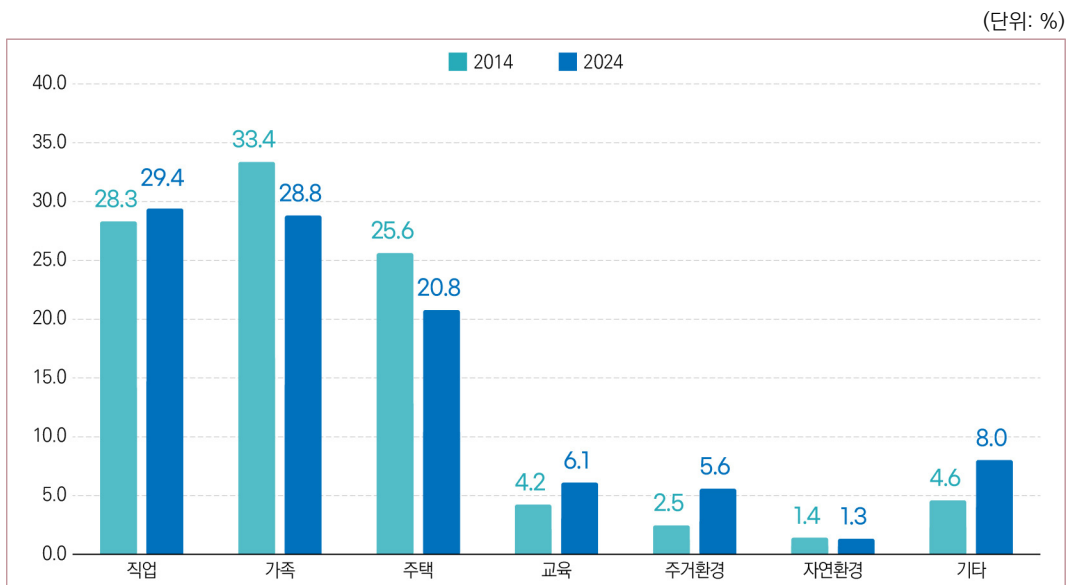
전입신고서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직접 작성하며 전입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기기입 방식의 특성상 실제 이사 원인과 다를 수 있어 정확한 이동 사유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인구이동통계는 매월 데이터가 생성되어 공표되므로 시간적 상세성과 적시성이 매우 높은 데이터로 평가되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인구이동 연구에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이상일·조대현, 2024).

전입신고서 상의 이동 사유는 직업(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가족(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주택(주택구입, 계약만료, 집세, 재개발 등), 교육(진학, 학업, 자녀교육 등), 주거환경(교통, 문화·편의시설 등), 자연환경(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기타 등 총 7가지가 제시되어 있으며 신고자는 주된 한 가지를 기재한다.

이동사유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가장 최근의 자료인 2024년과 10년 전인 2014년의 전체 이동사유를 분석한 결과, 2014년은 ‘가족’(33.4%)을 사유로 이동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다음은 ‘직업’(28.3%), ‘주택’(25.6%), ‘기타’(4.6%), ‘교육’(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의 경우 ‘직업’(29.4%)을 이유로 이동하는 비중이 가장 크며, ‘가족’(28.8%), ‘주택’(20.8%), ‘기타’(8.0%), ‘교육’(6.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10년 전에 비해 ‘가족’, ‘주택’을 이유로 한 거주 이동의 비율은 감소하였으며, ‘직업’, ‘교육’, ‘주거환경’ 등을 사유로 하는 이동의 비율은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2 전입사유 (2014,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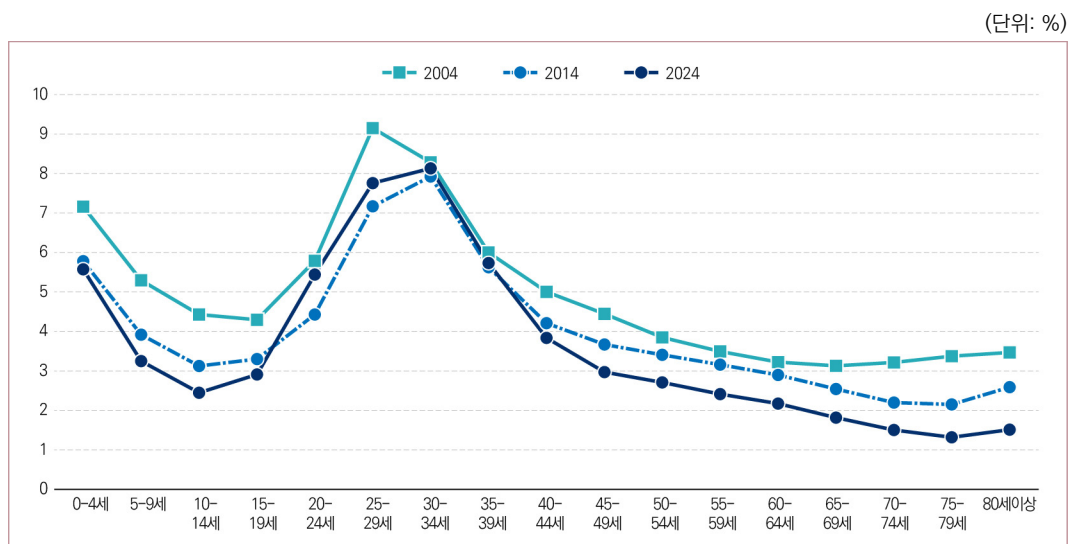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14년, 2024년 (KOSIS 검색일자: 2025.3.22.)

2. 연령별 인구이동의 변화

인구이동은 생애과정과 관계가 있으며, 인구이동률로 나타나는 인구이동성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분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이상림·최인선, 202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기에는 이동성이 낮은 수준을 보이다가 20세 이후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이동률은 급격히 증가하고, 일정한 연령이 지나 가족 형성기와 출산기에 이르면 이동률은 최고점을 나타내다가 생애과정이 진전되면서 점차 이동률이 낮아지는 패턴을 보인다(이상림·최인선, 2023).

지난 20년간 동일 시도 내에서 다른 시군구로 이동하는 비교적 단거리 이동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이동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발견하였으나 20~34세의 경우, 2004년에 비해 2014년에는 이동률이 감소하였다가 2024년에는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3).

그림 2-3 연령별 시도내 시군구간 이동(2004, 2014, 2024)



주: 이동률=이동자수/연앙인구×100

연앙인구=(전년말 주민등록인구+금년말 주민등록인구)/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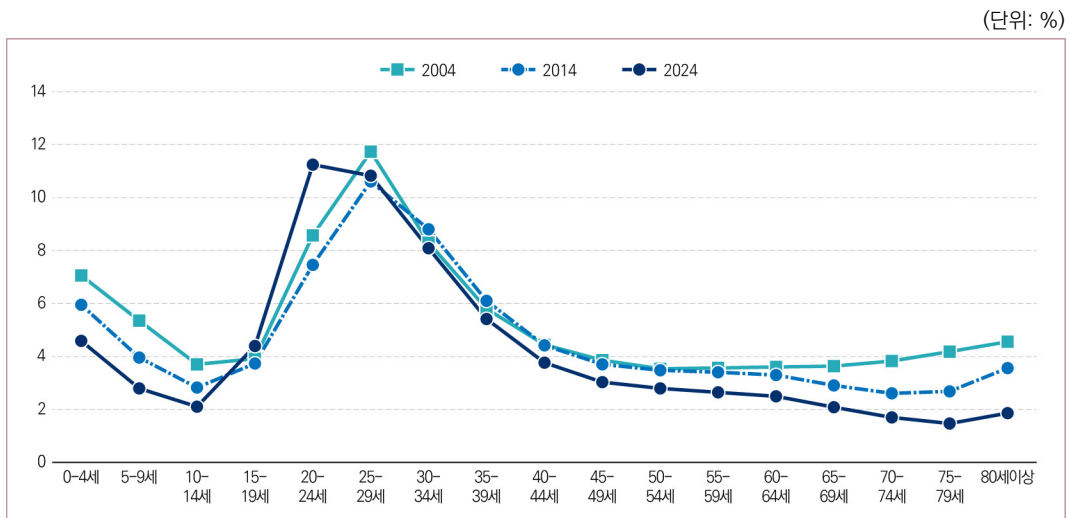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04년, 2014년, 2024년 (KOSIS 검색일자: 2025.3.22.)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대 청년들은 비교적 원거리의 시도간 이동이 근거리의 시군구간 이동보다 이동률이 오히려 높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10년전에 비해 20~24세 청년들의 시도간 이동률은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2004년, 2014년, 2024년의 자료를 통해 살펴본 결과(그림 2-4) 전반적으로 시도간 이동률은 감소하였으나 15~19세, 20~24세의 경우 과거에 비해 시도간 이동률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볼 때 생애주기 특성상 교육, 직업 등을 사유로 타 시도로의 이동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수도권 대학에 대한 선호, 대학 졸업 후 구직을 위한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많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2-4 연령별 시도간 인구이동(2004, 2014, 2024)



주: 이동률=이동자수/연앙인구×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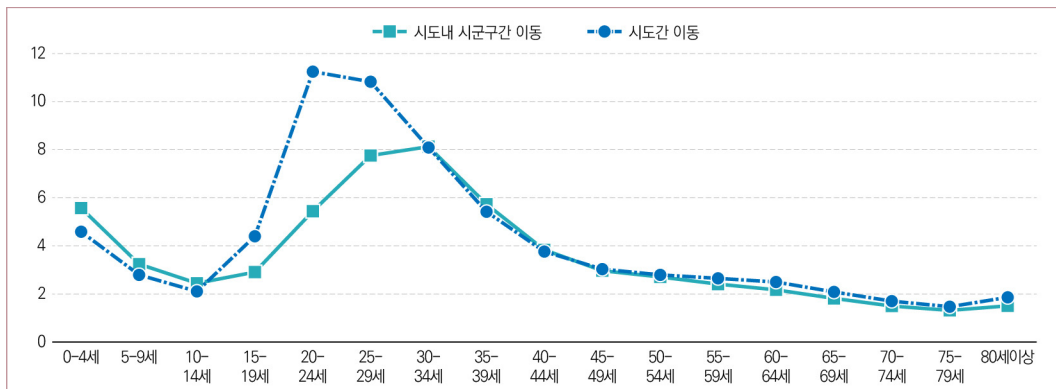
연앙인구=(전년말 주민등록인구+금년말 주민등록인구)/2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04년, 2014년, 2024년 (KOSIS 검색일자: 2025.3.22.)

[그림 2-5]를 통해 연령별 시군구간 이동과 시도간 이동에서 발견되는 특성은 시도간의 이동은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집중되면서 매우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는 것이다. 시군구간 이동은 시도간 이동에 비해 20대 전반에 걸쳐 연령에 따른 이동률의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덜 급격하게 나타난다(그림 2-5). 인구이동의 정점 연령은 시도간 이동에서 20-24세로 연령대가 더 낮게 나타나고 시군구간 이동의 정점 연령은 30-34세로 확인된다.

그림 2-5 연령별 시군구, 시도간 이동을 비교(2024)

(단위: %)



주: 이동률=이동자수/연앙인구×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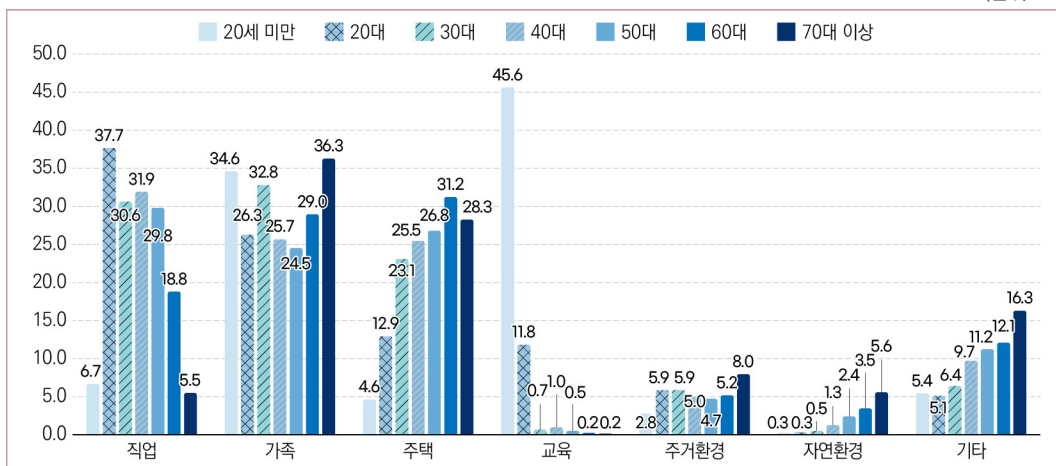
연앙인구=(전년말 주민등록인구+금년말 주민등록인구)/2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24년 (KOSIS 검색일자: 2025.3.22.)

전입의 이유를 최근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2-6]과 같다. 2024년 전입 신고 건수에 대해서 전입사유를 연령별로 검토한 결과, 20세 미만의 전입사유는 '교육'(45.6%)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20대, 40대, 50대는 '직업'(20대 37.7%, 40대 31.9%, 50대 29.8%), 60대는 '주택'(31.2%), 70대는 '가족'(36.3%)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으로 인한 이동은 2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30대, 40대, 50대의 이동에 있어서도 약 30%의 비율을 차지하여 2024년 전입사유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림 2-6 연령별 전입사유(2024)

(단위: %)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24년 (KOSIS 검색일자: 2025.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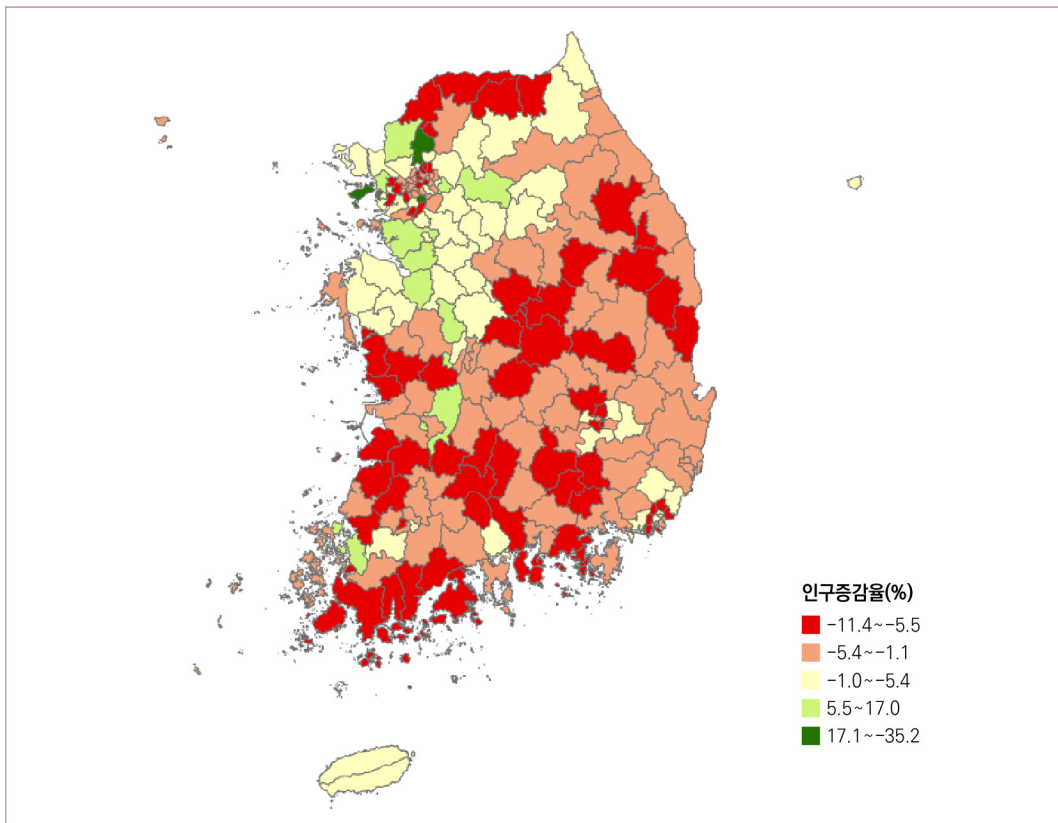
제2절

인구이동과 지역 특징

1. 지역별 인구 분포

최근 5년간 인구증감 변화를 살펴보면 2020년 대비 2024년 인구 수가 크게 증가한 지역은 경기 과천시(35.2%), 대구 중구(27.6%), 경기 양주(25.5%), 인천 중구(19.6%), 인천 서구(16.9%), 경기 화성시(13.3%) 순이다. 반면, 인구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난 지역은 서울 용산구(-11.4%), 강원 태백시(-11.2%), 부산 금정구(-9.8%), 부산 중구(-9.6%), 강원 철원군(-9.4%), 정선군(-9.1%)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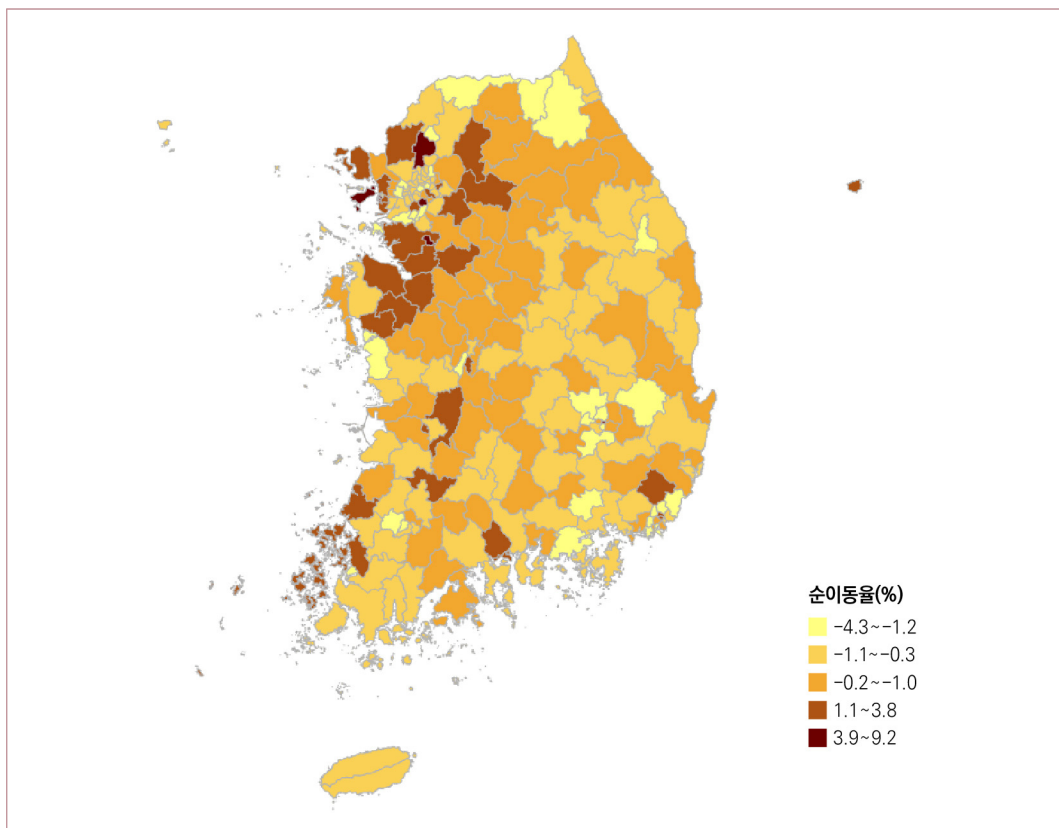
그림 2-7 시군구별 2020년 대비 2024년 인구증가율



주: 2020-2024년 인구증가율=[(2024년 총인구-2020년 총인구)/2020년 총인구]×100
 자료: 통계청 KOSIS,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활용하여 작성

작년 한해 동안 발생한 시군구별 인구 대비 이동인구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전출자에 비해 전입자가 많아 인구가 순유입되고 있는 즉, 순이동률이 높은 지역은 대구 중구(9.2%)이며 그 다음은 경기 양주시(7.6%), 오산시(5.2%), 과천시(5.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아 인구가 순유출이 큰 지역, 즉 인구대비 전출자가 많아서 순이동률이 낮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4.3%), 경기 의왕시(-2.9%), 경북 칠곡군(-2.4%), 부산 금정구(-2.0%), 경기 군포시(-2.0%) 순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8 시군구별 순이동률(2024년)



주: 순이동률(인구 백명당 순이동자수) = (전입자수 - 전출자수) / 연앙인구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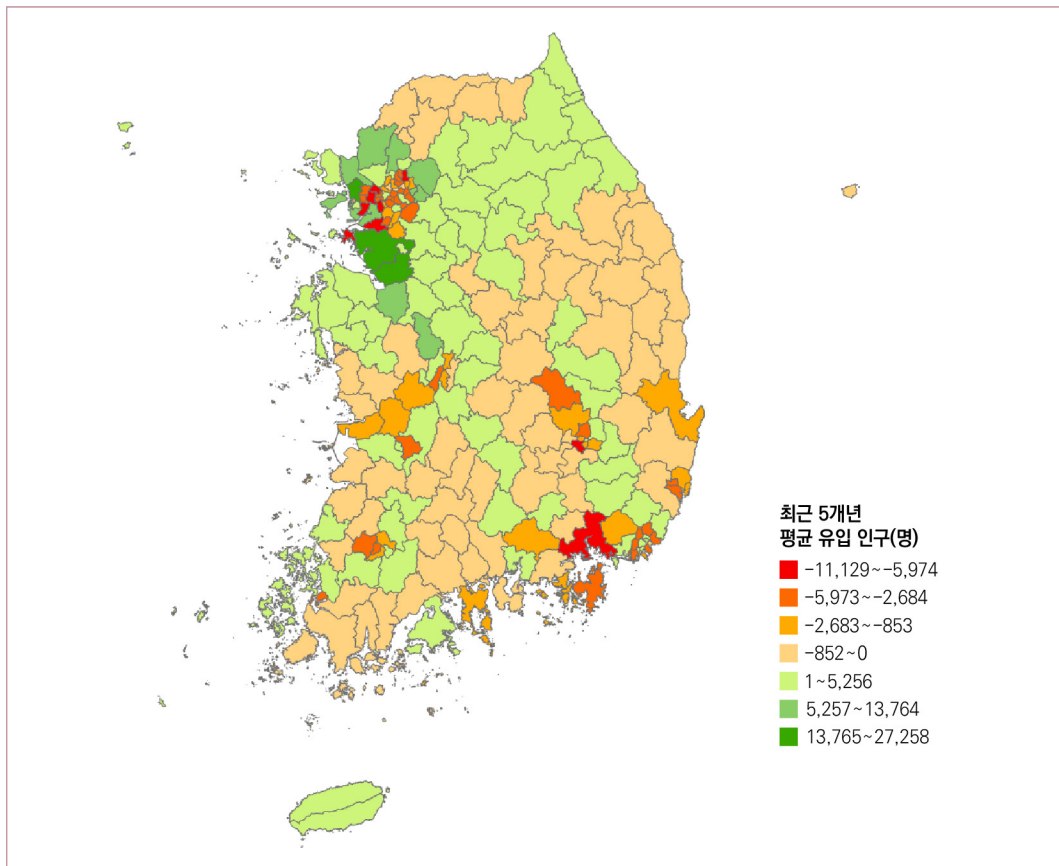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24년 자료 활용하여 작성

[그림 2-9]는 시군구 단위에서 최근 5개년간의 유입인구와 유출인구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지도로 나타낸 것이다. 즉, 유입인구가 유출인구보다 많은 지역은 순유입이 발생한 지역으로 초록색으로 표시하였으며,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많은 지역은 빨간색으로 순유출지역을 의미한다.

최근 5개년 동안 순유입이 제일 큰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로 평균적으로 연간 27,258명의 인구가 유입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인천광역시 서구 16,960명, 경기도 평택시 16,869명, 경기도 양주시 13,764명, 경기도 파주시 12,039명, 경기도 하남시 10,680명 순으로 주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해당된다.

반면에, 최근 5개년간 순유출이 가장 큰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11,129명이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8,349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8,206명, 경기도 광명시 -7,486명, 경상남도 창원시 -7,336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9 최근 5개년 평균 순유입인구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20~2024년 자료 활용하여 작성

[그림 2-10]은 유입인구 수에서 유출인구 수를 뺀 순유입 인구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측정하기 위해 LISA(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 지표를 산출한 결과이다. 순유입 인구가 공간적으로 어디에 높은 값 또는 낮은 값의 군집을 형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란지수(Moran's I)를 활용하여 핫스팟(hot spot)과 콜드스팟(cold spot) 분석을 수행하였다.

국지적 모란지수(Local Moran's I)는 인접지역 간 유출입인구의 수치적 유사성을 근거로 공간적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통계량이다. 이를 통해 정(+)의 공간적 상관이 형성되는 핫스팟과 그 반대의 콜드스팟 군집을 탐색하여 공간적 군집 패턴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특정 지역들이 전체 지역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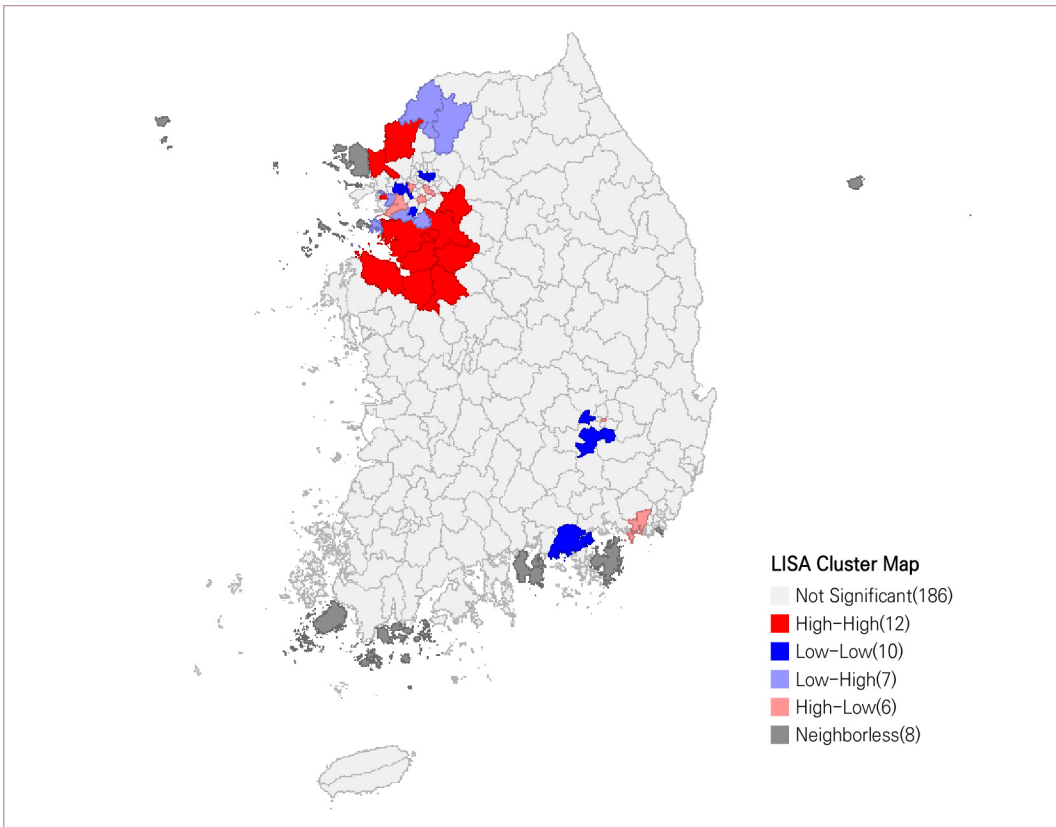
LISA Cluster Map은 국지적 공간적 연관성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여 나타낸다. 순유입이 높은 값들이 군집한 지역(High-High)은 핫스팟으로 빨간색으로, 순유입이 낮은 값들이 군집한 지역(Low-Low)은 콜드스팟으로 파란색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순유입이 낮은 지역 주변에 위치한 순유입이 높은 이상치(outlier) 지역(High-Low)은 분홍색으로, 순유입이 높은 지역 주변에 위치한 순유입이 낮은 이상치(outlier) 지역(Low-High)은 하늘색으로 표시하였다.

분석 결과, 순유입이 높은 지역들이 군집을 형성하는 핫스팟(High-High)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기도 평택시, 오산시, 용인시, 파주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등 총 12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인구 유입이 활발한 지역들이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순유입이 낮은 지역들이 군집을 이루는 콜드스팟(Low-Low)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기도 부천시, 군포시, 경상남도 고성군 등 총 10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공간적 이상치(outlier)에 해당하는 지역들도 확인되었다. 순유입이 높은 지역에 인접하지만 해당 지역 자체는 순유출이 발생한 지역(Low-High)으로는 인천광역시 동구, 남동구, 경기도 수원시, 동두천시, 안산시 등 7개 지역이 나타났다. 반대로 순유출이 발생하는 지역에 인접해 있으나 순유입이 발생한 지역(High-Low)으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강남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구광역시 중구, 경기도 과천시, 시흥시 등 6개 지역이 확인되었다.

그림 2-10 최근 5개년 평균 순유입인구 LISA Cluster Map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20~2024년 자료 활용하여 작성

종합하면, LISA 분석을 통해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로 상이한 인구 이동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경기도 남부 지역은 인구 유입이 집중되는 핫스팟을, 서울특별시 일부 지역과 경기도 서부 일부 지역은 인구 유출이 집중되는 콜드스팟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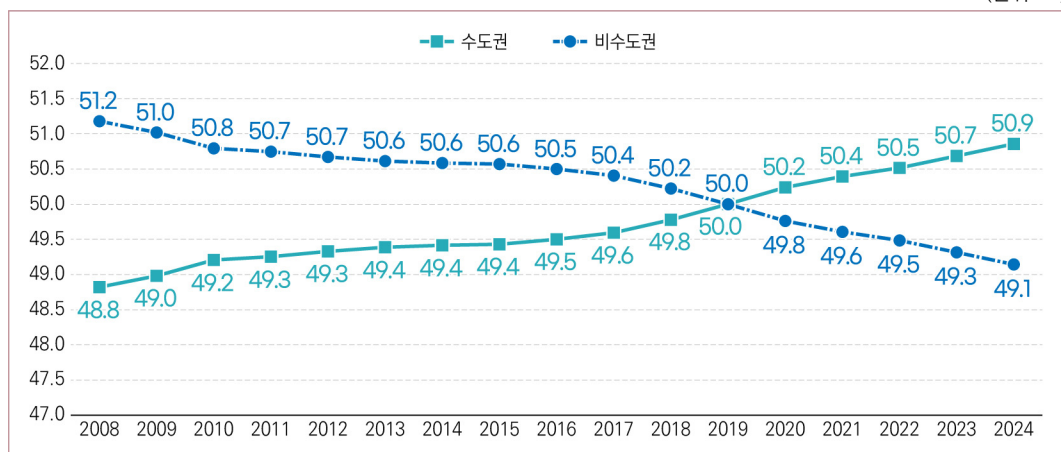
예를 들어, 인구 유입이 두드러진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 양주시 등은 대기업 반도체 산업과 테크노밸리 등을 기반으로 한 풍부한 일자리 창출과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 이 동시에 이루어진 지역이다. 이러한 산업 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이 젊은 수요층의 대거 유입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인구 유출이 크게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원도심과 전통적인 제조업 산업단지가 쇠퇴하면서 인구가 유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광명시는 재건축·재개발의 영향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도권 내에서도 산업구조 변화, 도시개발, 교통망 등 인프라 여건에 따라 인구 이동 패턴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수도권 인구 집중

앞에서 최근 순유입이 큰 지역을 살펴본 결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크게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전국 인구에 대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거주 인구 비율과 그 외 지역인 비수도권의 인구 비율을 비교해보면(그림 2-11),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증가하면서 비수도권 인구 비율은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까지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다가 2012-2017년에는 안정화되었으나, 2017년 이후 다시 수도권 인구 집중이 증가하여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였고, 그 추세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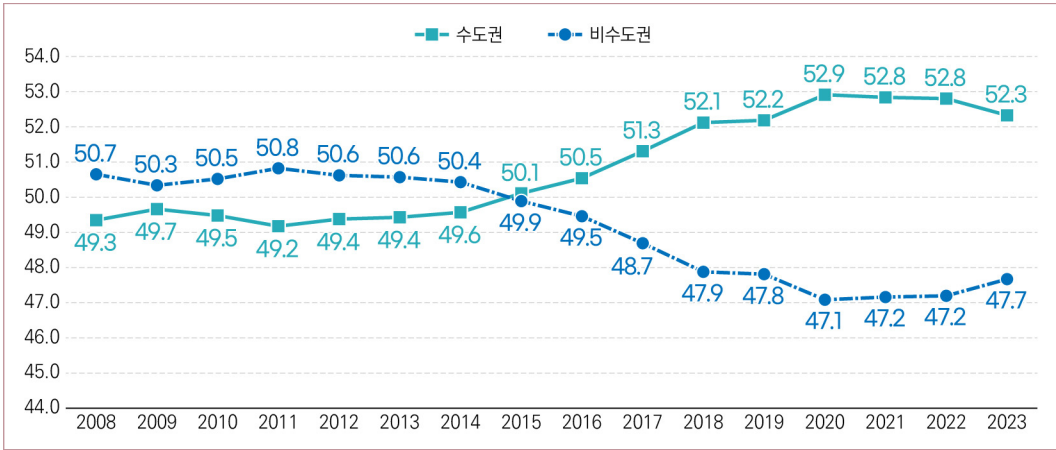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각년도.

인구 수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 총생산(GRDP)을 활용하여 경제적 규모를 비교할 수 있다. 지역내 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은 일정기간 동안 지역 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격의 합으로 산출되며 경제구조나 규모를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지역내 총생산(명목)은 2015년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앞지른 후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그림 2-12).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인구의 양 뿐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업 등 각종 산업과 부동산 등 자산의 수도권 집중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질적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1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GRDP 비율

(단위: %)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통계청 KOSIS, e-나라지표

제3장

지역 인구구조 변화

제1절 | 저출생과 고령화

제2절 | 청년 인구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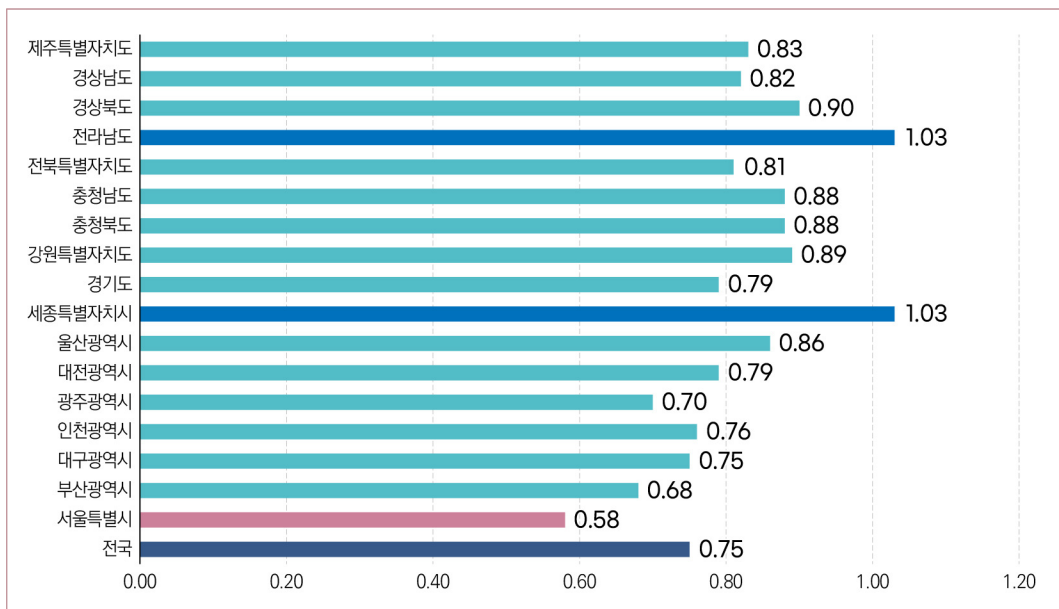
제1절

저출생과 고령화

1. 저출생: 지역별 합계출산율

2024년 시도별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전라남도(1.03)와 세종특별자치시(1.0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상북도(0.90), 강원특별자치도(0.89), 충청남도(0.88), 충청북도(0.88) 순으로 높은 편을 알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 합계출산율은 0.5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시도별 합계출산율(2024)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24년 (KOSIS 검색일자: 2025.3.23.)

[표 3-1]과 [그림 3-2]에 제시된 2024년 시군구별 합계출산율을 분석한 결과, 지역 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 영광군으로 1.71을 기록하였으며, 이어서 전라남도 강진군 1.60,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1.51, 전라남도 장성군과 경상북도 청송군이 각각 1.3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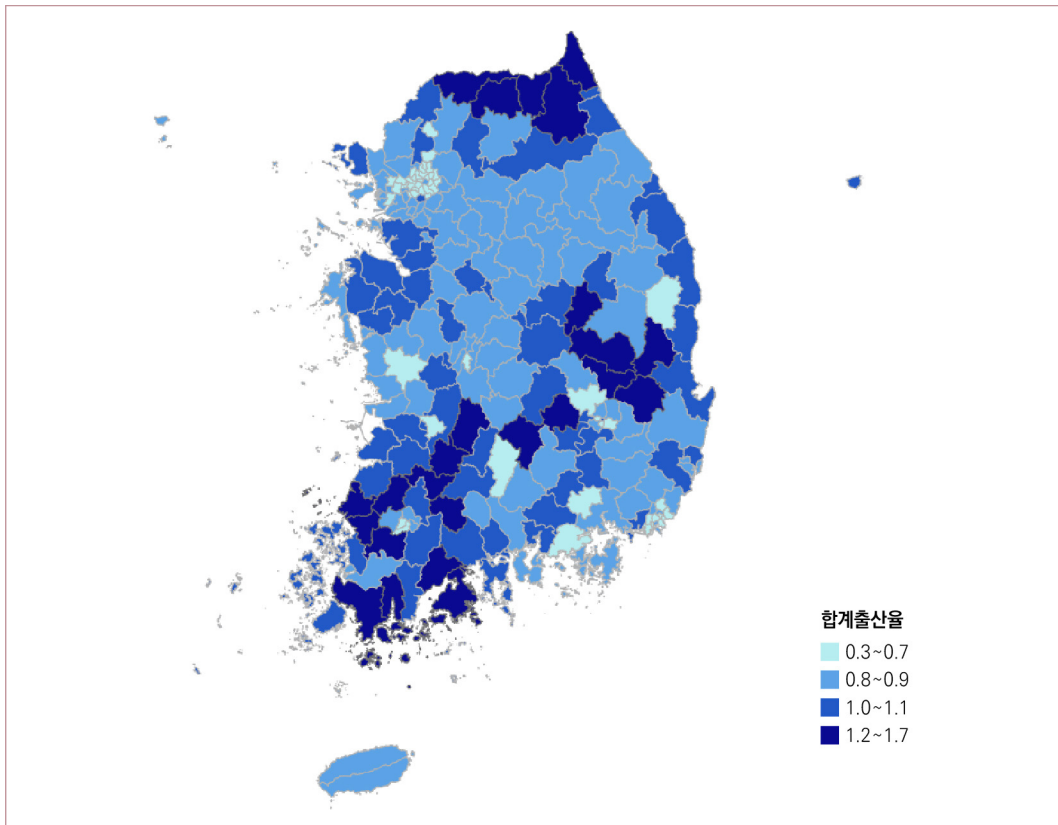
반면,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광역시 중구로 0.30을 기록하였다. 뒤를 이어 서울특별시 관악구 0.40,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강북구가 각각 0.45, 서울특별시 광진구 0.46 순으로 낮은 출산율을 보였다. 하위 5개 지역 중 4개 지역이 서울특별시에 집중되어 있어 대도시 지역의 저출산 현상이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 시군구별 합계출산율 순위(상위, 하위)

상위	시군구		합계출산율	하위	시군구		합계출산율
1	전라남도	영광군	1.71	1	부산광역시	중구	0.30
2	전라남도	강진군	1.60	2	서울특별시	관악구	0.40
3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1.51	3	서울특별시	종로구	0.45
4	전라남도	장성군	1.34	3	서울특별시	강북구	0.45
4	경상북도	청송군	1.34	5	서울특별시	광진구	0.46
6	대구광역시	군위군	1.30	6	서울특별시	마포구	0.52
6	전라남도	함평군	1.30	6	서울특별시	금천구	0.52
8	전라남도	고흥군	1.28	6	부산광역시	금정구	0.52
9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1.27	6	대구광역시	남구	0.52
9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1.27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0.54
11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1.25	11	서울특별시	용산구	0.57
11	경상북도	영천시	1.25	11	서울특별시	도봉구	0.57
13	전라남도	완동군	1.24	11	부산광역시	수영구	0.57
1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1.23	11	인천광역시	계양구	0.57
15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1.22	15	서울특별시	강서구	0.58
15	경상북도	예천군	1.22	15	서울특별시	송파구	0.58
17	전라남도	해남군	1.21	15	경상남도	함양군	0.58
18	전라남도	보성군	1.20	18	서울특별시	중구	0.59
18	경상남도	거창군	1.20	1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0.59
20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1.19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0.59
2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1.17	18	광주광역시	서구	0.59
21	경상북도	의성군	1.17	18	광주광역시	남구	0.59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24년 (KOSIS 검색일자: 2025.3.23.)

그림 3-2 시군구 합계출산율(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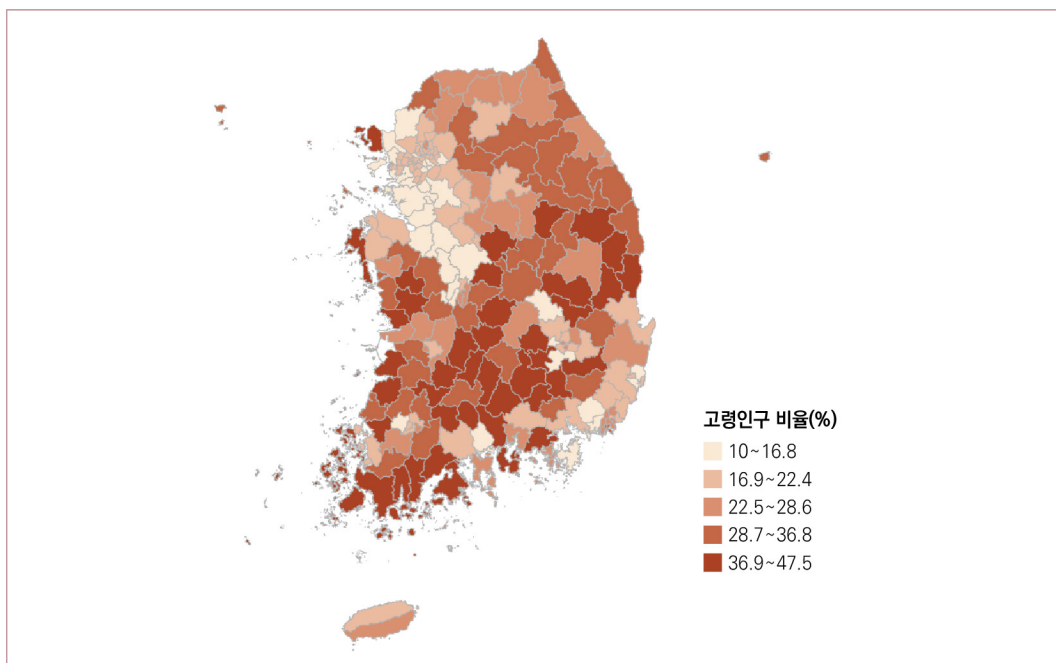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24년 자료 활용하여 작성

2. 고령화: 지역별 고령인구 비율

인구구조 측면에서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시군구 단위로 고령층(65세 이상) 비율을 분석한 결과(그림 3-3), 고령층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로 10.9%를 기록하였으며, 이어서 세종시 11.6%, 울산광역시 북구 11.8%, 광주광역시 광산구 12.1%, 경기도 오산시 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12.3%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신도시 개발이나 산업 발달로 젊은 인구 유입이 활발한 특징을 보인다.

반면, 고령층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북도 의성군으로 47.5%에 달하였으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47.3%, 전라남도 고흥군 45.7%, 경상남도 합천군 45.3%, 경상북도 청도군 44.3% 순으로 높은 고령화율을 보였다. 이들 지역은 주로 농촌 지역으로 인구 유출과 저출산으로 인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3 시군구 고령인구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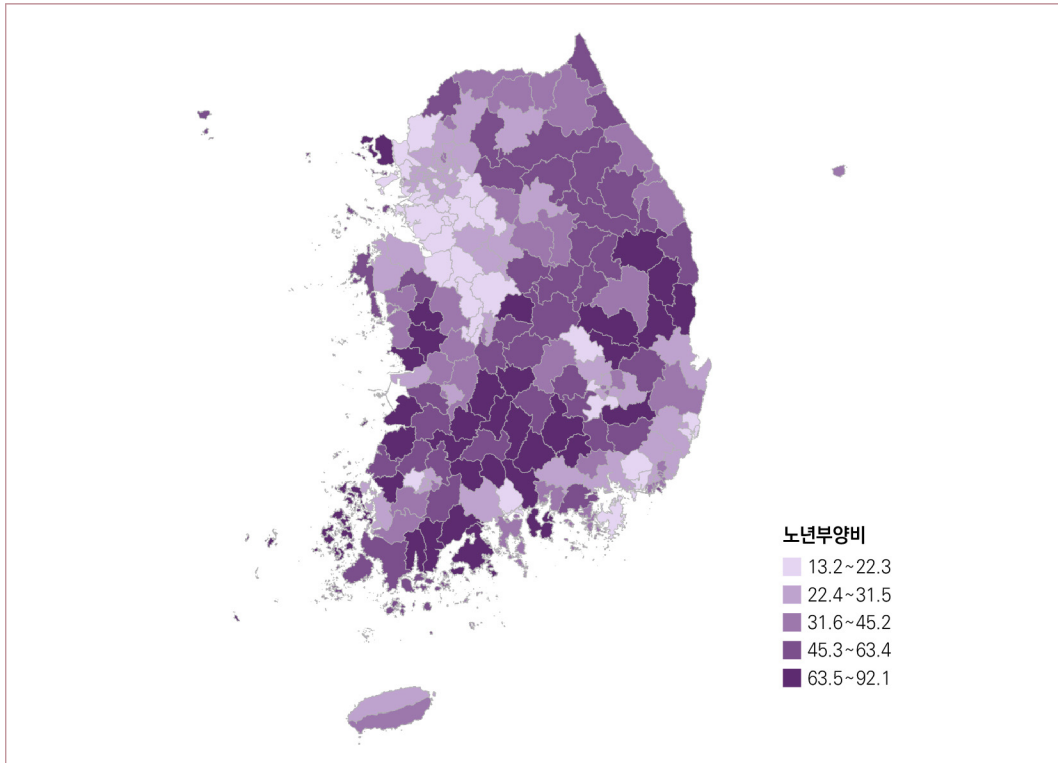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2024년) 자료 활용하여 작성

고령인구 비율과 연동하여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생산가능인구)에서도 시군구 간 현저한 격차가 확인되었다(그림 3-4).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의 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인구구조의 불균형 상황을 보여준다.

노년부양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북도 의성군으로 92.1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약 92명의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어서 전라남도 고흥군 86.0, 대구광역시 군위군 83.5, 경상남도 합천군 82.6, 전라남도 보성군 81.1 순으로 높은 노년부양비를 나타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농촌 지역으로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부양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반면, 노년부양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로 13.2를 기록하였으며, 울산광역시 북구 14.4, 광주광역시 광산구 14.6, 경기도 시흥시 14.7, 세종시 14.8 순으로 낮은 노년부양비를 보였다. 이들 지역은 젊은 인구 유입이 활발하고 산업 발달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부양 부담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3-4 시군구 노년부양비(2023년)



주: 노년부양비 = (고령인구/생산연령인구) × 10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23년) 자료 활용하여 작성

제2절

청년 인구이동

1. 연령별 인구이동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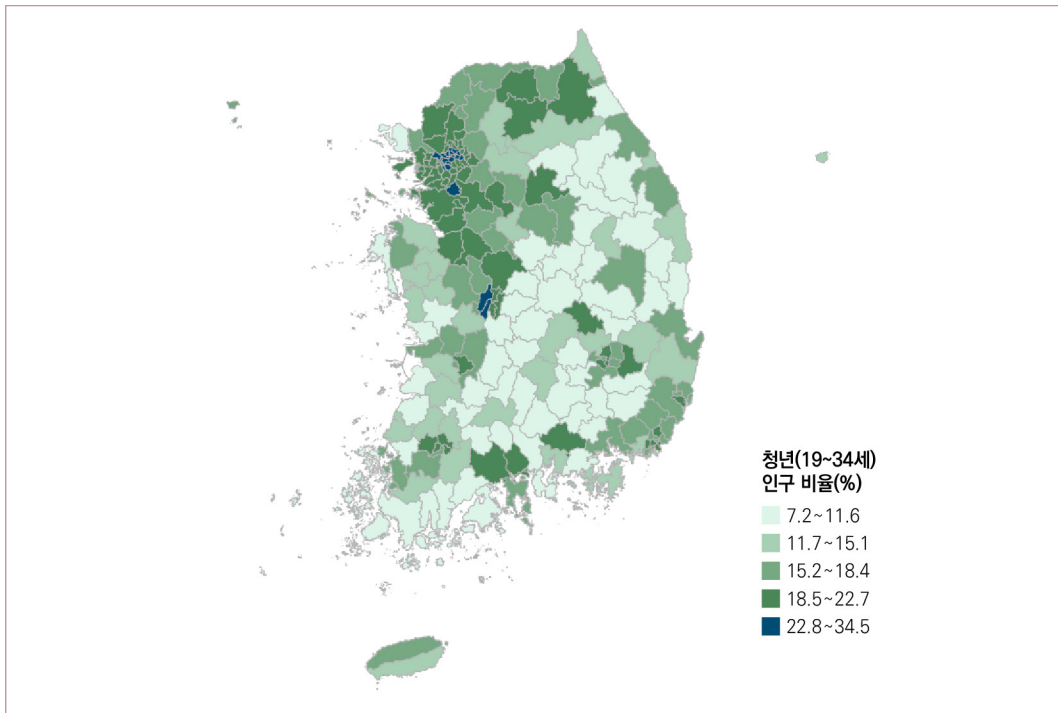
앞서 2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전 연령대 중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인구구조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인구이동의 주요 대상인 청년층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본법 제3조에 근거하여 청년층을 19~34세로 정의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지역 인구 대비 청년층 비율을 분석한 결과, 지역 간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로 34.5%를 기록하였으며, 이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27.6%, 영등포구 26.6%, 동작구 26.5%, 마포구 26.5%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지역 대부분이 서울특별시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청년층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반면, 청년층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7.2%에 그쳤으며, 경상북도 의성군과 봉화군이 각각 7.6%, 경상북도 청도군이 7.9% 순으로 낮은 청년층 비율을 보였다. 이들 지역은 주로 농촌 지역으로 청년층의 도시 유출로 인한 인구구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층 비율이 가장 높은 관악구(34.5%)와 가장 낮은 군위군(7.2%) 간에는 27.3%p의 격차를 보여, 청년인구 분포의 지역적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5 시군구 청년인구비율(2024년)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24년) 자료 활용하여 작성

청년층의 이동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 행정구역 경계를 넘나드는 시도간 인구이동을 연령별¹⁾로 분석하였다(그림 3-6, 7, 8). 20~24세, 25~29세, 30~34세 청년집단 모두에서 수도권 내 시도간 이동, 즉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간의 이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에게 수도권이 교육, 취업, 주거 등의 핵심 기회를 제공하는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경상남도과 부산광역시 간의 이동,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광역시와 인접 도지역 간의 기능적 연계가 청년층 이동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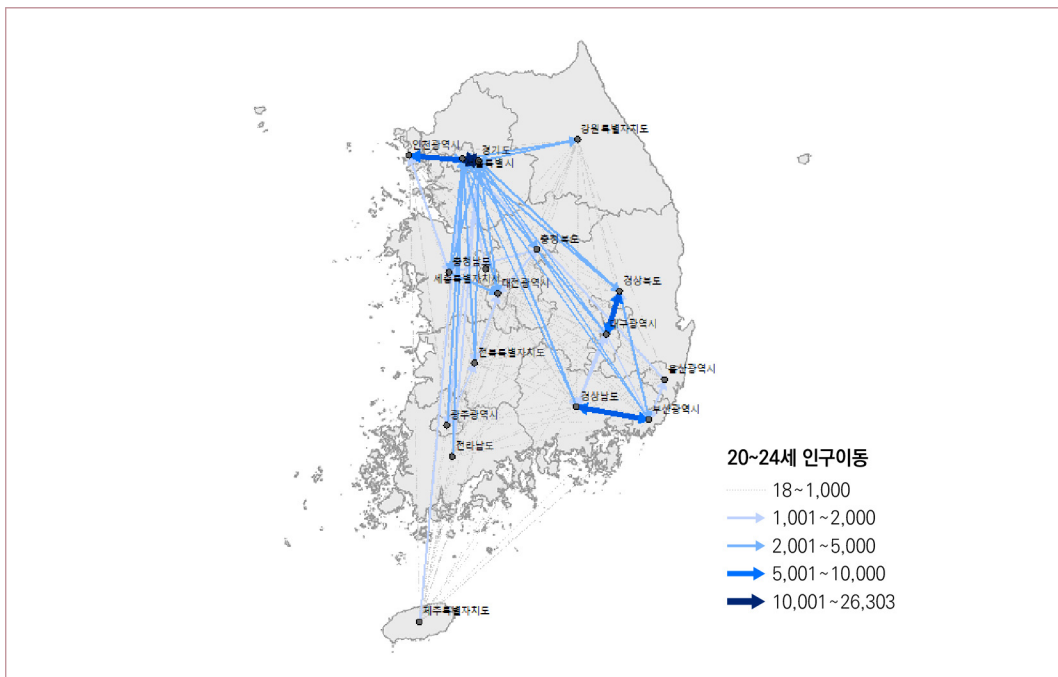
연령별 이동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20~24세 연령집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경상남도에서 부산광역시로의 이동(7,816명)과 경상북대에서 대구광역시로의 이동(5,833명)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 진학이나 첫 취업 등으로 인한 광역시로의 집중 현상으로 해석된다.

1) 여기에서는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의 5세 연령별 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20~24세, 25~29세, 30~34세로 구분하여 청년의 이동을 살펴봄

25-29세 연령집단의 특징적인 이동 패턴은 경기도에서 충청남도로의 이동(5,027명)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 점이다. 이는 취업 후 직장 이동이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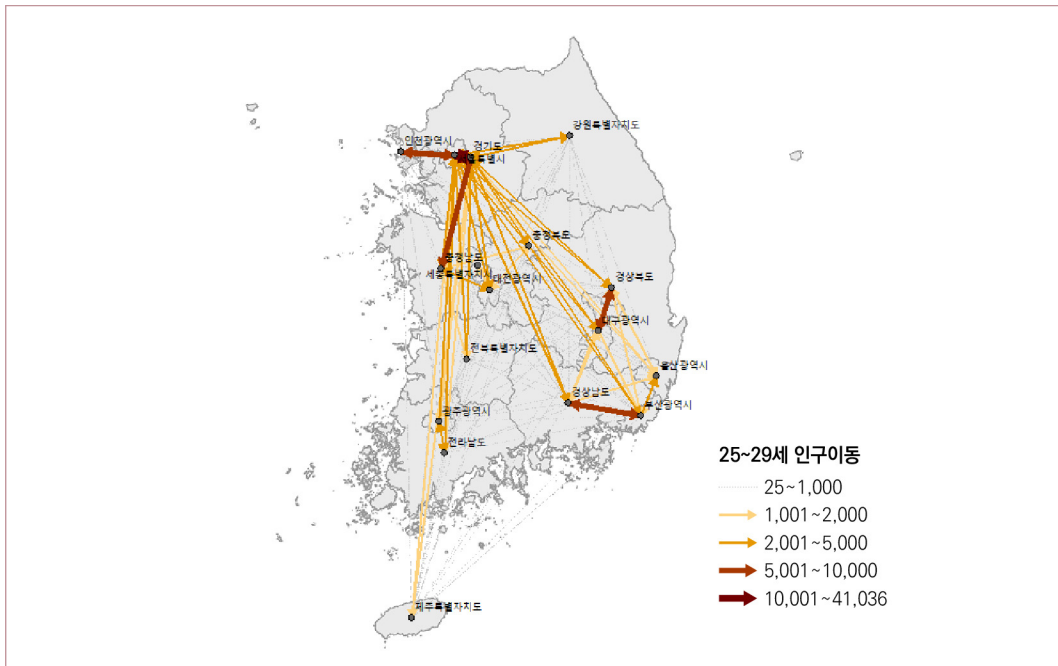
30-34세 연령집단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로의 이동(46,204명)이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이동(33,933명) 또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결혼, 출산, 내집 마련 등 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주거 이동이 수도권 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며, 특히 30대 초반 청년층에서 서울과 경기도 간의 양방향 이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6 20-24세 시도간 이동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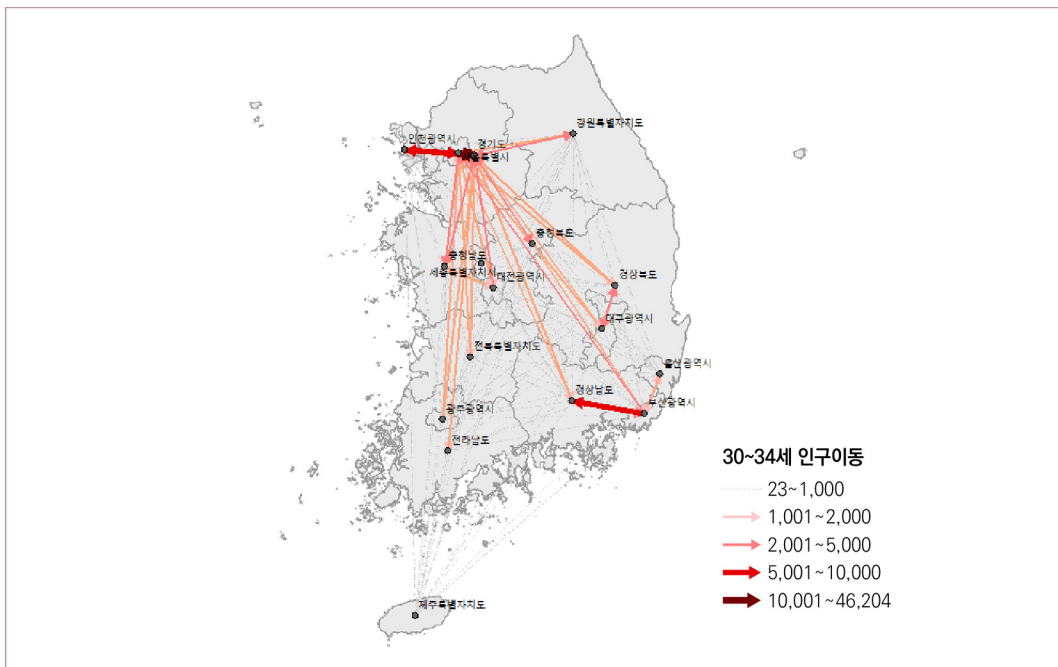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24년) 자료 활용하여 작성

그림 3-7 25~29세 시도간 이동 네트워크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24년) 자료 활용하여 작성

그림 3-8 30~34세 시도간 이동 네트워크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24년) 자료 활용하여 작성

2024년 시군구별 20-24세 연령집단의 순유입율을 분석한 결과(표 3-2), 지역 간 최대 37.1%p의 현저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 초반 청년층의 지역별 집중과 유출 현상이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한다.

20-24세 순유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로 17.1%를 기록하였으며 이어서 대구광역시 중구 16.7%, 인천광역시 중구 11.7% 순으로 높은 순유입률을 나타냈다. 이들 상위 지역들은 대부분 대학가나 도심 지역으로 교육 및 취업 기회가 집중된 특징을 보인다.

반면, 20-24세 순유출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남도 남해군으로 -20.0%를 기록하여 심각한 청년층 유출 현상을 보였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19.3%, 경상남도 고성군 -16.3%, 경상남도 하동군 -16.0%, 경상북도 봉화군 -15.1% 순으로 높은 순유출률을 나타냈다. 이들 지역은 주로 농촌 지역이나 소규모 군 단위로,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청년층이 대도시로 이주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인구 유출 현상으로 이해된다.

표 3-2 시군구별 20-24세 순이동률 순위(상위, 하위)

(단위: %)

상위	시군구		20-24세 순이동률	하위	시군구		20-24세 순이동률
1	서울특별시	관악구	17.1	1	경상남도	남해군	-20.0
2	대구광역시	중구	16.7	2	대구광역시	군위군	-19.3
3	인천광역시	중구	11.7	3	경상남도	고성군	-16.3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9.6	4	경상남도	하동군	-16.0
5	서울특별시	광진구	9.3	5	경상북도	봉화군	-15.1
5	서울특별시	동작구	9.3	6	경상남도	함양군	-14.5
7	서울특별시	금천구	9.0	7	경상북도	상주시	-14.4
8	서울특별시	마포구	8.6	8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14.1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8.1	9	경상남도	거창군	-13.8
10	경상북도	안동시	7.8	9	경상남도	산청군	-13.8
1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7.4	11	경상북도	청도군	-13.6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7.1	12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13.4
13	서울특별시	중구	7.0	13	경상북도	의성군	-13.3
14	경상북도	경산시	6.7	14	전라남도	곡성군	-13.2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6.6	15	경상남도	창녕군	-12.7
16	부산광역시	중구	6.3	16	경상북도	문경시	-12.5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6.3	16	경상북도	영덕군	-12.5

주: 순이동률=순이동자수/연앙인구×100

연앙인구=(전년말 주민등록인구+금년말 주민등록인구)/ 2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24 (KOSIS 검색일자: 2025.3.23.)

2024년 시군구별 25-29세 연령집단의 순이동률을 분석한 결과(표 3-3), 지역 간 최대 20.9%p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29세 순유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포천시로 10.8%를 나타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동구 10.3%, 인천광역시 동구 10.0% 순으로 높은 순유입률을 나타냈다.

반면, 25-29세 순유출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북도 청도군으로 -10.1%를 기록하였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9.9%, 충청남도 서천군 -9.7%, 경상남도 남해군 -9.3%, 경상북도 청송군 -9.0% 순으로 높은 순유출률을 보였다. 흥미로운 점은 25-29세 연령집단에서는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 강서구와 같은 도시 지역에서도 상당한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20대 중후반에 접어들면서 직장, 결혼,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위해 보다 나은 기회와 여건을 찾아 이동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표 3-3 시군구별 25-29세 순이동률 순위(상위, 하위)

(단위: %)

상위	시군구		25-29세 순이동률	하위	시군구		25-29세 순이동률
1	경기도	포천시	10.8	1	경상북도	청도군	-10.1
2	대구광역시	동구	10.3	2	부산광역시	강서구	-9.9
3	인천광역시	동구	10.0	3	충청남도	서천군	-9.7
4	충청남도	서산시	8.1	4	경상남도	남해군	-9.3
5	경기도	광주시	7.1	5	경상북도	청송군	-9.0
6	서울특별시	동작구	7.0	6	경상북도	울진군	-8.3
7	경기도	시흥시	6.4	6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8.3
8	충청남도	예산군	6.2	8	경상남도	함양군	-8.1
8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6.2	8	전라남도	완도군	-8.1
10	충청남도	금산군	5.5	10	경상남도	거창군	-7.9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5.4	11	경상남도	하동군	-7.6
12	전라남도	장성군	5.1	12	경상남도	산청군	-7.3
13	충청북도	단양군	4.4	13	전라남도	곡성군	-7.1
13	전라남도	함평군	4.4	13	경상북도	철곡군	-7.1
13	서울특별시	송파구	4.4	15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7.0
16	전라남도	담양군	3.9	1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7.0

주: 순이동률=순이동자수/연앙인구×100

연앙인구=(전년말 주민등록인구+금년말 주민등록인구)/ 2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24 (KOSIS 검색일자: 2025.3.23.)

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으로의 연령별 순이동자 수를 분석한 결과(표 3-4), 20대가 54,055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진학, 취업, 사회 진출 등으로 인해 20대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집중 이동하는 현상을 보여주며, 수도권이 청년층에게 교육과 경제활동의 핵심 기회를 제공하는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3-4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입연령별 순이동자수

(단위: 명)

전입지	연령별	순이동자수
서울	20세 미만	358
	20대	36,561
	30대	-26,224
	40대	-12,864
	50대	-16,707
	60대 이상	-25,816
경기	20세 미만	3,808
	20대	13,121
	30대	23,338
	40대	5,289
	50대	5,089
	60대 이상	13,573
인천	20세 미만	4,300
	20대	4,373
	30대	6,398
	40대	4,005
	50대	2,289
	60대 이상	4,278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24년 (KOSIS 검색일자: 2025.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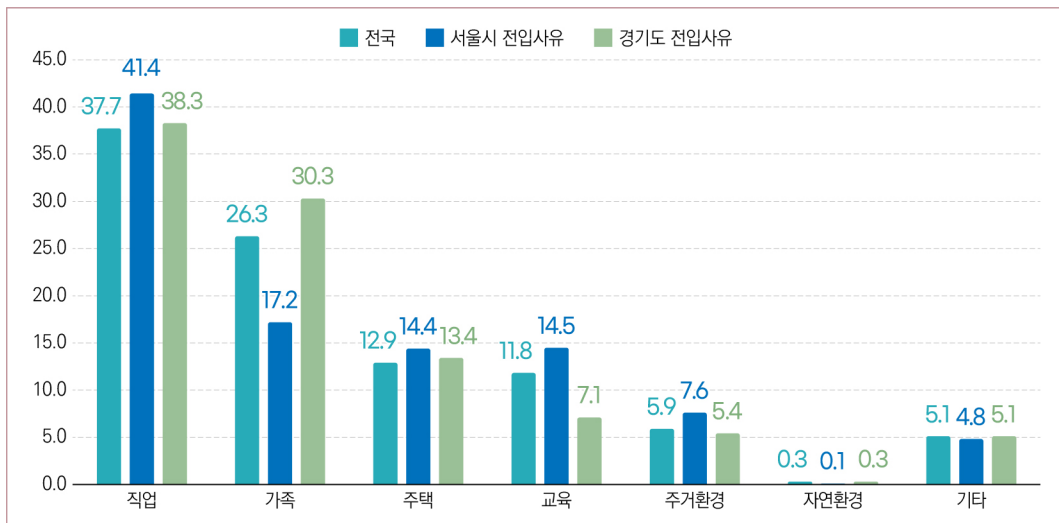
20대 청년층의 수도권 전입 사유를 분석한 결과(그림 3-9), 직업 요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가 취업과 경제활동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로 이동하는 20대의 전입 사유는 직업(41.4%)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이어서 가족(17.2%), 교육(14.5%), 주택(14.4%)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환경(7.6%), 기타(4.8%), 자연환경(0.1%)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직업과 교육 요인이 합쳐서 55.9%에 달해, 취업과 학업을 위한 이동이 주요 동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교육 요인(14.5%)이 상대적

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서울 소재 대학과 교육기관의 집중도를 반영한다.

경기도로 이동하는 20대의 전입 사유는 직업(38.3%)이 가장 높았으나, 서울과 달리 가족(30.3%) 요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이어서 주택(13.4%), 교육(7.1%), 주거환경(5.4%), 기타(5.1%), 자연환경(0.3%) 순으로 분석되었다. 경기도의 경우 가족 요인(30.3%)이 서울(17.2%)보다 13.1%p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결혼이나 가족 형성 등의 생애주기 변화로 인해 경기도를 선택하는 20대가 많음을 시사한다. 반면 교육 요인(7.1%)은 서울(14.5%)보다 낮아, 경기도가 교육보다는 직업, 주거와 가족생활을 위한 정착지로 선호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림 3-9 20대 전입 사유(전국, 서울시, 경기도)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24년(KOSIS 검색일자: 2025.3.22.)

제4장

지역 인구이동 이슈와 정책방향

제1절 | 인구감소와 관련된 지역 특성

제2절 | 청년층 수도권으로의 이동

제3절 | 지역맞춤형 인구 전략

제1절

인구감소와 관련된 지역 특성

인구규모가 작은 지역일수록 인구감소가 크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구이동으로 인한 지역의 인구 유출은 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농촌 지역 또는 비수도권의 중소도시에서 심각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지역의 인구증감과 관련되는 인구변수는 무엇일까?

2024년 기준 전국 229개 지역(시군구)의 인구증가율과 주요 인구지표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표 4-1), 인구규모가 작은 지역일수록 인구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지역의 인구 수가 많을수록, 순유입 비율이 높을수록, 고령인구 비율이 낮을수록 인구증가율이 높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1 지역(전국 시군구) 인구 변수들 간 상관관계

	인구증가율	인구수	순이동율	합계출산율	고령인구비율
인구증가율	1				
인구수	.258**	1			
순이동율	.767**	.059	1		
합계출산율	.115	-.381**	.173**	1	
고령인구비율	-.474**	-.691**	-.158*	.384**	1

주: ** $p < 0.001$, * $p < 0.05$

특히 주목할 점은 지역의 인구증감은 주로 자연증감 보다는 사회적 증감, 즉 인구 유출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합계출산율은 지역의 인구증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지역별 인구 변화가 자연증감보다는 인구이동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흥미로운 역설적 현상도 발견되었다. 인구규모는 합계출산율 및 고령인구 비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 이는 인구규모가 큰 대도시일수록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는 많지만 출산율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수도권 대도시 지역이 비수도권 중소도시들보다 청년층은 많지만 합계출산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현상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인구규모는 인구증가율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어, 일정 수준 이상의 인구규모를 확보하는 것은 지역인구 감소의 방지를 위해 유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인구유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의 대도시와 거점도시 중심으로 ‘인구댐’ 역할을 하는 지역을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초광역권이나 메가시티 구축, 행정 통합 및 연합 등의 정책적 접근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소규모 지역의 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개별 지역 단위보다 권역 단위의 접근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출산율 제고와 인구 유입 정책을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두 정책이 서로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 설계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제2절

청년층 수도권으로의 이동

비수도권 지역의 20대 청년 수도권 유출 현상

앞 장에서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으로의 청년층 유출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전출시도별,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작년 한 해 동안 비수도권 지역의 19-34세 청년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으로의 전입을 살펴보면(표 4-2), 충청남도에서 16,178명으로 가장 많이 이동하였으며, 부산광역시 15,240명, 경상남도 14,624명, 강원특별자치도 13,518명, 경상북도 13,262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성별로 살펴보면 충청남도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은 19-24세 여성(3,919명)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부산광역시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은 25-29세 남성(3,609명)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은 편이었다(표 4-2, 그림 4-1).

표 4-2 전출시도별 수도권 전입 청년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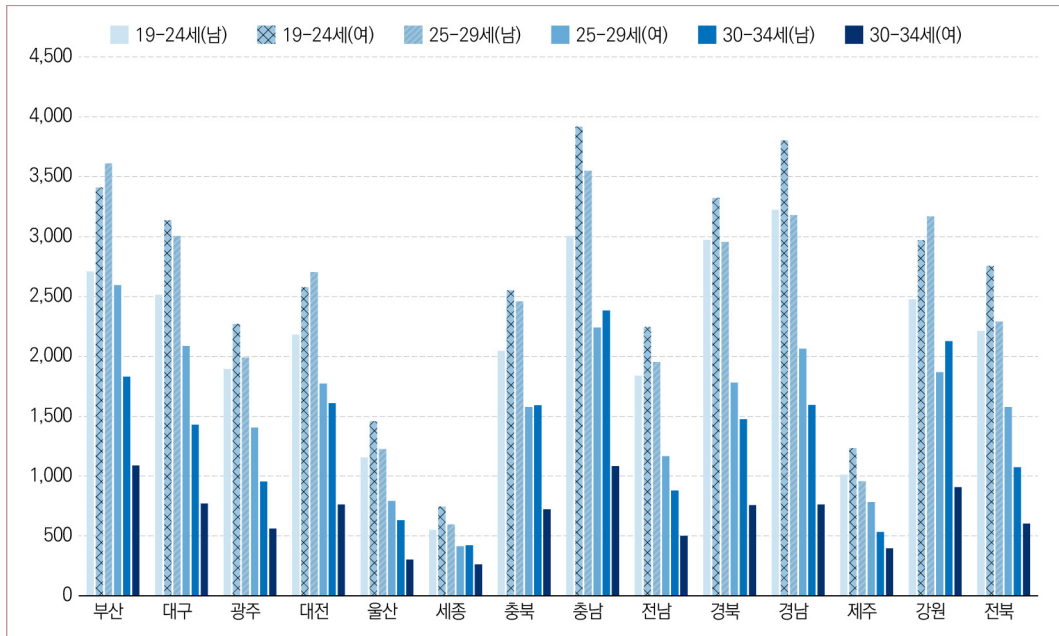
(단위: 명)

	19-24세		25-29세		30-34세	
	남	여	남	여	남	여
부산광역시	2,709	3,410	3,609	2,595	1,829	1,088
대구광역시	2,513	3,136	3,004	2,085	1,428	770
광주광역시	1,894	2,268	1,989	1,406	956	561
대전광역시	2,183	2,577	2,704	1,771	1,610	764
울산광역시	1,156	1,457	1,226	792	633	304
세종특별자치시	551	746	598	413	423	261
충청북도	2,045	2,551	2,459	1,577	1,591	723
충청남도	3,004	3,919	3,550	2,239	2,384	1,082
전라남도	1,839	2,245	1,951	1,168	878	500
경상북도	2,973	3,322	2,955	1,780	1,475	757
경상남도	3,224	3,801	3,180	2,062	1,595	762
제주특별자치도	1,013	1,233	957	784	532	395
강원특별자치도	2,477	2,970	3,167	1,867	2,128	909
전북특별자치도	2,212	2,755	2,291	1,577	1,075	604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24년 마이크로데이터 활용하여 작성

그림 4-1 수도권 전입 청년의 전출 시도(연령별, 성별)

(단위: 명)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24년 마이크로데이터 활용하여 작성

비수도권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전입사유를 살펴보면(표 4-3), 19-24세 청년 남성은 교육(47.9%), 직업(39.6%)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여성도 직업(48.3%), 교육(39.9%)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5-29세 청년층의 수도권 전입사유는 직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 약 77%를 나타냈다. 이는 사회진출과 함께 경력개발을 위한 수도권 이주가 본격화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시기에는 대학 졸업 후 직장을 구하거나 더 나은 근무조건과 발전 가능성을 찾아 이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0-34세 청년층의 수도권 전입 사유도 남성과 여성 모두 직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남성 73.7%, 여성 65.4%). 그리고 다른 연령대에 비해 주택(남성 11.8%, 여성 13.9%)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 생애주기상 30-34세의 주택을 이유로 한 이주는 단순히 주거 선택을 넘어서 종합적 정주여건을 고려하여 수도권으로 전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표 4-3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전입 청년 인구 이동사유

(단위: %)

	19-24세		25-29세		30-34세	
	남	여	남	여	남	여
직업	39.6	48.3	76.9	76.9	73.7	65.4
가족	1.7	1.9	2.8	3.6	6.1	8.9
주택	5.1	4.4	6.2	6.9	11.8	13.9
교육	47.9	39.9	8.6	6.2	2.1	2.9
주거환경	2.7	2.9	2.6	3.5	2.9	4.3
자연환경	0.04	0.04	0.1	0.1	0.1	0.2
기타	2.9	2.6	2.8	2.8	3.2	4.2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24년 마이크로데이터 활용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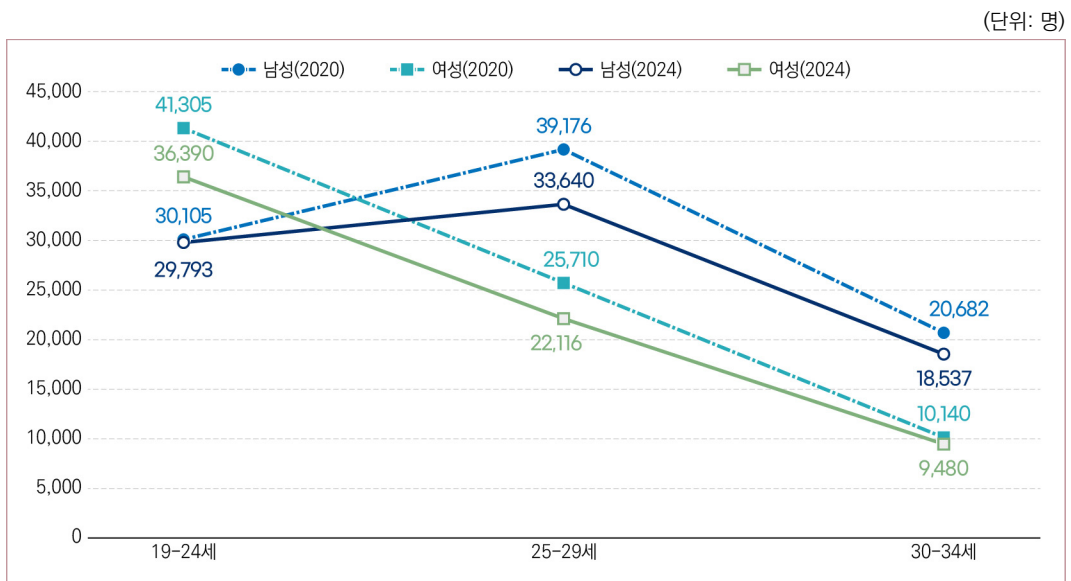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비수도권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활발하지만 성별과 연령에 따라 지역청년의 유출 패턴이 다르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19-24세에, 남성은 25-29세에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가장 활발하다. 이러한 차이는 성별에 따른 생애주기와 사회진출 패턴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우 19-24세에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고등교육 기관과 다양한 교육 및 취업 기회를 추구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반면 남성은 25-29세, 즉 대학 졸업 후 본격적인 사회진출과 취업 시기에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활발해진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와 경력 개발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지역의 청년유출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성별과 연령대를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되며 청년층의 지역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중요하며, 지역 기반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력 개발 기회 확대를 마련해야 한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청년층의 이동 패턴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20년과 2024년을 비교 분석한 결과(그림 4-2), 전반적인 청년 전입 규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연령대별 분석에서는 두 시점 모두 일관된 패턴을 보였는데, 남성의 경우 25-29세 연령대에서 수도권 전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여성은 19-24세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이동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성별 이동 시기의 차이는 남성은 사회 초년기 취업 활동 시기에, 여성은 대학 진학 및 사회진출 준비 시기에 수도권 이주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2 수도권 전입 청년인구(2020, 2024)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20년, 2024년 마이크로데이터 활용하여 작성

제3절

지역맞춤형 인구 전략

지역에서의 계속 거주 의향 분석

이 절에서는 지역 인구의 이동 원인과 지역별 이동 양상을 보다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하고자 하는 의향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까? 지역을 떠나고자 하는 의향에는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까? 이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국회미래연구원의 2024년 국민 미래인식·가치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현재 지역에서의 거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국민 미래인식·가치관조사 대상은 전국 거주 만 15세 이상의 일반 국민이며, 표본들은 통계청 집계구를 활용하였다. 조사방법은 가구 방문하여 가구원 전원을 면접 조사하였고, 조사 완료된 전체 표본 수는 총 7,766가구의 총 14,397명으로 본 연구는 이를 대상으로 모집단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분석을 위해 현재 거주지역에서 향후 5년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거주의향을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개인특성과 지역생활 관련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구성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분석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표 4-4]와 같다.

표 4-4 본 분석의 측정 변수 설명

유형	변수	측정
종속	거주의향	향후 5년 이후에도 현재 시도에서 거주하고 싶다 (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개인특성	나이	만 나이
	성별	여성1, 남성0 (준거: 남성)
	혼인상태(배우자 유무)	기혼(배우자 있음)=1, 배우자없음(미혼, 이혼, 사별)=0 (준거: 배우자없음)
	개인소득	월 평균 개인소득(1:소득없음, 2:100만원 미만, 3:100~200만원, 4:200~300만원, 5:300~400만원, 6:400~500만원, 7:500~600만원, 8:600~700만원, 9:700~800만원, 10:800~900만원, 11:900~1,000만원, 12:1,000만원 이상)
	학력	대학재학이상=1, 고졸이하=0 (준거:고졸이하)
	구직활동 여부	지난 일주일 동안의 주된 활동이 구직 또는 취업을 위한 준비=1, 그 외 다른 활동 =0

유형	변수	측정
지역생활	주거형태(자가)	자기집=1, 전월세 등=0
	광역시(특별시) 거주	광역시(특별시) 거주=1, 도 거주=0
	수도권 거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거주=1, 비수도권 거주=0
	현재 시도 거주기간	현재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산 기간(년)
	동네환경 만족도	자신의 삶에 있어 동네환경에 대한 만족도 (0: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0:매우 만족한다)
	도움요청할 사람 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의 수(명)
	생활수준 만족	자신의 삶에 있어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 (0: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0:매우 만족한다)
	안전감 만족	자신의 삶에 있어 안전감에 대한 만족도 (0: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0:매우 만족한다)
	미래안정성 만족	자신의 삶에 있어 미래의 안정성 만족도 (0: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0:매우 만족한다)

분석 결과(표 4-5) 구축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높은 유의성을 보였다($F=211.424$, $p<0.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R^2 값은 0.171로 전체 변동의 17.1%를 설명하며, Durbin-Watson 통계량 1.736은 잔차의 독립성 가정을 충족하여 모형이 통계적으로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표 4-5), 개인특성 요인 중에서는 나이가 거주 의향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0.209$, $p<0.001$). 즉, 나이가 많을수록 현재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려는 의향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 요인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거주 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beta=0.022$, $p<0.01$), 혼인 상태에서는 기혼자가 미혼, 사별보다 상대적으로 현재 지역에 머물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다($\beta=0.041$, $p<0.001$).

반면 학력 수준과 구직활동 여부는 거주 의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대학 재학 이상의 고학력자일수록($\beta=-0.038$, $p<0.001$), 그리고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beta=-0.021$, $p<0.01$) 향후 현재 지역을 떠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개인소득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본 분석에서는 경제적 요인이 거주 의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생활 관련 요인들 중에서는 현재 시도에서의 거주기간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보였다($\beta=0.155$, $p<0.001$). 즉, 해당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향후에도 계속 머물고자 하는 의향이 강해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지역 특성 측면에서는 특별시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계속 거주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beta=0.033$, $p<0.001$), 주거 형태에서는 자가 거주자가 전월세보다 거주 의향이 높았다($\beta=0.015$, $p<0.05$). 사회적 관계 요인으로는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

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beta=0.051$, $p<0.001$), 지역의 안전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beta=0.029$, $p<0.01$) 거주 의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 거주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동네환경 만족도, 생활수준 만족도, 미래안정성 만족도 등의 주관적 만족도 지표들도 거주 의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본 분석 결과는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거주 의향이 복합적인 요인들의 상호 작용에 의해 결정됨을 보여준다. 특히 거주기간의 누적효과와 생애주기적 특성인 연령과 혼인상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자의 경우,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오래 거주할수록 지역에 정착하려는 의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학력자와 구직활동자의 높은 이동 가능성은 지역 차원에서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들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이동하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문화적 기회 제공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

또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규모와 안전감이 거주 의향을 높인다는 결과는 지역 공동체 강화와 안전한 환경 조성이 주민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지역에서의 이웃 간 유대감 형성과 치안 개선 등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효과적인 정착 정책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분석에서 주목할 점은 소득 수준이나 각종 만족도 지표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결과이다. 이는 주민의 지역 정착에 있어 경제적 요인이나 주관적 만족도보다는 사회적 연결성과 같은 지역사회 내 관계적 요인들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지역 정책 수립 과정에서 물질적 조건 개선뿐 아니라, 주민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지역 정착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4-5 현 시도에서의 거주의향 영향요인 분석 결과

변수		B	베타
	(상수)	2.327***	
개인특성	나이	0.009***	0.209
	소득	0.003	0.006
	성별(여성)	0.035**	0.022
	혼인상태(기혼)	0.065***	0.041
	학력(대학재학이상)	-0.061***	-0.038
	구직활동 여부	-0.140**	-0.021
지역 생활	자가 여부	0.029*	0.015
	특별시광역시 거주	0.053***	0.033
	수도권 거주	-0.025	-0.021
	현재 시도 거주기간	0.007***	0.155
	동네환경 만족	0.017	0.152
	도움요청할 사람 수	0.016***	0.051
	생활수준 만족	0.009	0.015
	안전감 만족	0.016**	0.029
	미래안정성 만족	-0.004	-0.007
F		211.424***	
adj. R^2		0.171	
Durbin-Watson		1.736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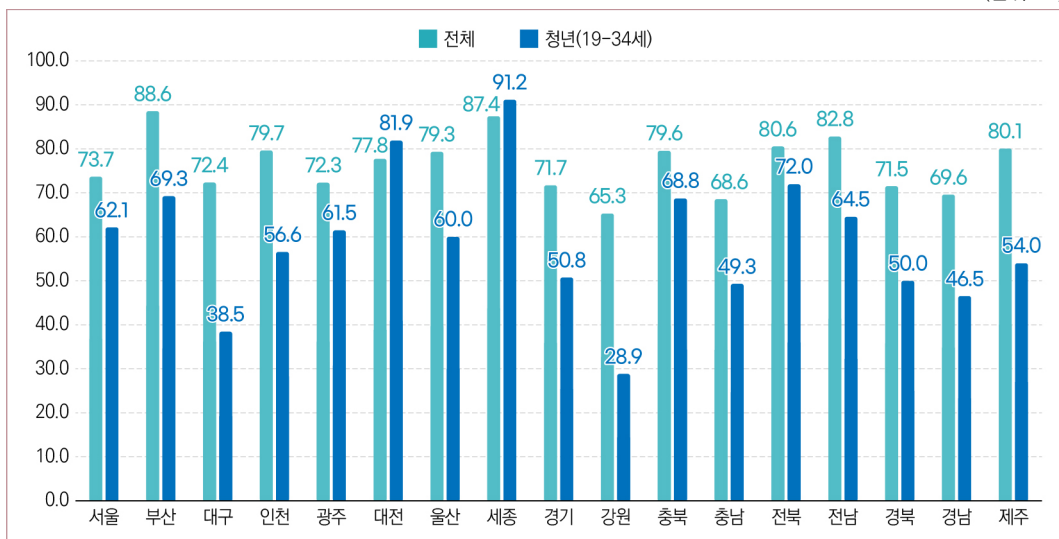
앞에서 계속 거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시도별로 계속 거주 의향의 차이가 나타날까? 그리고 청년들은 현재 거주지역에서 향후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의향이 낮게 나타날까? 이를 위해 2024년 국민 미래인식·가치관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그림 4-3]은 전국 17개 시도별로 향후 5년 이후에도 현재 거주지역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응답(‘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의 비율을 전체 응답자와 청년층(19~34세)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전국 17개 시도의 거주의향은 평균 70% 내외의 수준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주민들의 정착 의향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 간 편차는 상당히 큰데, 부산이 88.6%로 가장 높은 반면 강원도는 65.3%로 가장 낮아 23.3%p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전체와 청년층을 비교하면 차이가 발견된다. 전반적으로 청년층의 거주 의향이 전체 응답자보다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청년층이 취업, 교육, 결혼 등의 이유로 지역 이동에 대한 개방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대전, 세종은 전체 응답자에 비해 청년층의 거주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청년층에게 매력적인 직업 및 거주 여건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3 5년 후 현재 시도에서의 거주의향

(단위: %)



주) '귀하는 향후 5년 이후에도 현재 시도에서 거주하고 싶으십니까?'에 대한 응답 중 '그런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을 합해 전체 응답자 중 차지하는 비율 산출

자료: 국회미래연구원, 2024 국민 미래인식 가치관조사 자료 활용

청년들의 계속 거주의향을 살펴본 결과 지역별 차이를 확인하였다. 예를 들면, 대전(81.9%)과 세종(91.2%)은 높은 거주의향을 보인 반면, 수도권 지역은 예상과 달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청년들의 계속 거주 의향에 대해서 서울 62.1%, 경기 50.8%, 인천 56.6%라는 수치는 현재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이유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조차 장기적으로는 높은 주거비용과 쾌적성, 삶의 질 측면의 한계로 인해 타 지역으로의 이주를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수도권 지역의 상황이다. 강원(28.9%), 대구(38.5%), 경남(46.5%), 등 지역에서 청년들의 거주의향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연령집단과 현저한 차이를 보여 청년층이 이들 지역에 정착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입은 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일자리, 교육 여건의 격차에서 기인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고임금의 양질의 일자리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자리 획득에 필요한 선호도 높은 대학들 또한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청년들의 수도권 이주 시기가 대학 진학 시점으로 점차 앞당겨지고 있음을 앞 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도권으로 이주한 청년들이 결혼과 육아를 하면서 장기간 거주하기에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 청년들의 거주지 선택 요인은 단순히 경제적 조건에만 국한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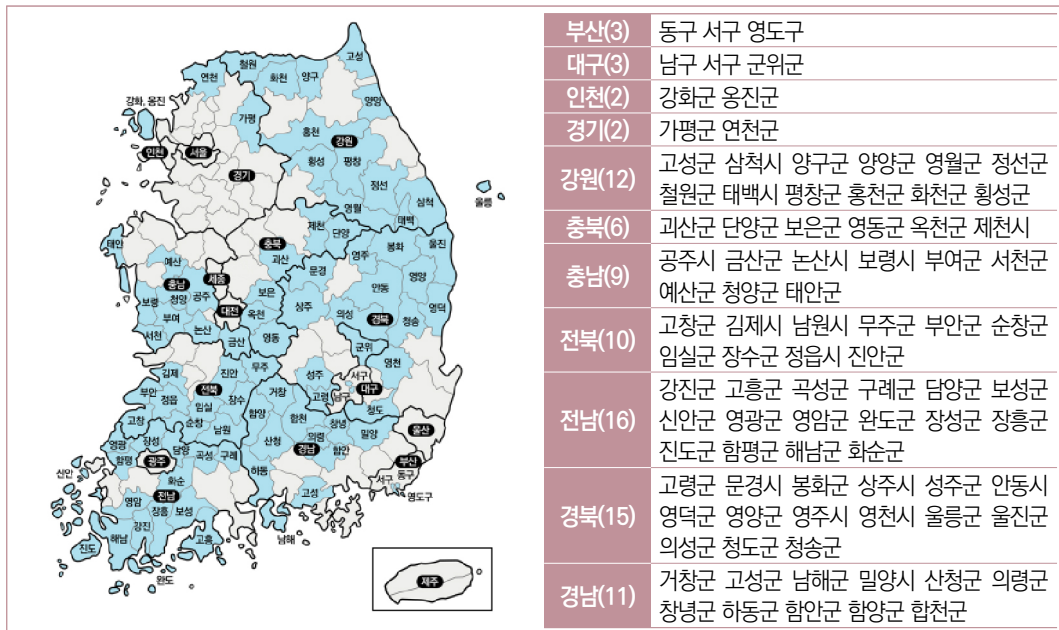
않기 때문이다. 일자리와 교육 기회 외에도 주거비용, 생활 환경의 쾌적성, 질 높은 정주 여건이 청년들의 거주지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청년들이 밀집한 수도권조차 장기 정착지로서의 매력이 제한적임을 보여주며, 청년들이 경제적 기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중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소멸위험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을까?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법적 근거로 지정되며, 5년 단위로 운영된다. 2021년 10월,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최초로 지정되어 있다.

인구감소지역 선정을 위해서는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7개 지표를 활용하여 인구감소지수를 산출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서울시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수도권 내에서도 인구감소가 심각한 일부 경기·인천 지역과 도심 공동화로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광역시 내 자치구는 포함되었다(그림 4-4).

그림 4-4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 청년의 유출입을 주요 지표로 반영했기 때문에, 선정된 인구 감소지역 대부분은 청년 유출이 많은 지역이다. 그렇다면 다른 연령층의 이동 패턴은 어떠한가?

중·장년층으로 분류되는 50-64세 인구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최근 5년간 인구 유출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장년층의 유입이 꾸준히 발생하는 지역들이 확인되었다(표 4-6, 7, 8, 9, 10).

먼저 인구감소지역 중 광역시 소속 지역을 중심으로 50-64세의 순유입(전입자에서 전출자를 뺀 값)을 살펴보면(표 4-6),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용진군과 같은 군 지역에서 중·장년층의 꾸준한 순유입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강화군의 경우 최근 5년간 3,157명의 중·장년층이 타 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6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인구감소지역 50-64세 순이동

(단위: 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최근5개년 합계
부산	동구	230	-209	50	477	-282	266
	서구	92	-213	411	-42	290	538
	영도구	-292	-117	-162	17	-214	-768
대구	남구	-221	-529	-205	-264	-160	-1,379
	서구	-390	-994	-630	993	-121	-1,142
	군위군	151	295	485	185	125	1,241
인천	강화군	573	824	666	392	702	3,157
	용진군	152	163	237	193	112	857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20-2024년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에 속한 인구감소지역의 50-64세 순유입 현황을 살펴보면(표 4-7), 최근 5년간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50-64세 인구의 순유입이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가평군(2,258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2,186명), 홍천군(2,103명)은 2천여 명이 넘는 순유입을 기록하였다.

표 4-7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 50-64세 순이동

(단위: 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최근5개년 합계
경기	가평군	426	536	412	415	469	2,258
	연천군	153	182	283	141	120	879

		2020	2021	2022	2023	2024	최근5개년 합계
강원	고성군	100	315	212	179	90	896
	삼척시	46	133	260	66	77	582
	양구군	0	89	71	65	17	242
	양양군	285	212	259	151	101	1,008
	영월군	194	264	327	176	143	1,104
	정선군	259	172	85	107	59	682
	철원군	6	1	27	82	59	175
	태백시	-63	-102	-40	-5	-36	-246
	평창군	225	295	431	245	161	1,357
	홍천군	453	510	484	291	365	2,103
	화천군	133	61	48	83	135	460
	횡성군	452	538	500	435	261	2,186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20~2024년

충청권 인구감소지역의 50-64세 순유입 현황을 살펴보면(표 4-8), 최근 5년간 모든 지역에서 꾸준한 순유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예산군(2,351명)과 태안군(2,169명)의 유입 인구가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충청북도, 충청남도 인구감소지역 50-64세 순이동

(단위: 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최근5개년 합계
충북	괴산군	603	403	24	267	312	1,609
	단양군	88	178	160	265	157	848
	보은군	234	291	272	202	157	1,156
	영동군	205	177	303	194	159	1,038
	옥천군	388	443	321	199	160	1,511
	제천시	215	389	356	248	188	1,396
충남	공주시	260	380	381	336	219	1,576
	금산군	297	379	438	457	245	1,816
	논산시	175	311	306	142	187	1,121
	보령시	346	215	310	226	125	1,222
	부여군	237	236	282	220	118	1,093
	서천군	207	238	283	225	221	1,174
	예산군	349	298	632	583	489	2,351
	청양군	174	214	219	232	139	978
	태안군	490	439	594	403	243	2,169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20~2024년

전라권 26개 인구감소지역의 최근 5년간 50-64세 인구 이동 패턴을 분석한 결과(표 4-9), 지속적인 순유입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전라남도 고흥군(2,076명)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2,043명)가 가장 많은 중·장년층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9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의 인구감소지역 50-64세 순이동

(단위: 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최근5개년 합계
전북	고창군	182	219	251	201	131	984
	김제시	252	296	699	491	305	2,043
	남원시	284	178	181	207	211	1,061
	무주군	142	202	219	140	115	818
	부안군	95	143	203	172	72	685
	순창군	150	83	244	184	189	850
	임실군	-50	117	226	140	128	561
	장수군	80	175	114	93	80	542
	정읍시	121	262	295	340	274	1,292
	진안군	209	284	233	213	138	1,077
전남	강진군	122	199	156	118	114	709
	고흥군	303	433	546	410	384	2,076
	곡성군	97	178	221	237	171	904
	구례군	76	182	123	191	154	726
	담양군	355	567	371	263	195	1,751
	보성군	171	259	217	153	142	942
	신안군	87	380	312	400	343	1,522
	영광군	33	130	363	162	340	1,028
	영암군	231	356	314	308	131	1,340
	완도군	177	83	151	51	78	540
	장성군	139	313	429	168	183	1,232
	장흥군	132	25	189	132	129	607
	진도군	329	62	116	105	101	713
	함평군	131	197	221	239	102	890
	해남군	216	304	232	206	135	1,093
	화순군	403	534	325	157	265	1,684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20~2024년

경상권 26개 인구감소지역의 50-64세 순유입 동향을 검토한 결과(표 4-10), 대부분 지역에서 안정적인 인구 유입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21년 이후로는 모든 지역이 중·장년층 인구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경상북도 영천시(2,911명), 경상

남도 밀양시(2,511명), 경상북도 의성군(2,061명)이 중·장년층 인구 유치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다.

표 4-10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인구감소지역 50-64세 순이동

(단위: 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최근5개년 합계
경북	고령군	49	166	198	227	266	906
	문경시	244	514	394	66	108	1,326
	봉화군	219	209	225	128	122	903
	상주시	-244	365	506	333	196	1,156
	성주군	290	291	417	264	225	1,487
	안동시	136	131	238	192	341	1,038
	영덕군	98	191	200	168	65	722
	영양군	110	121	112	67	95	505
	영주시	80	131	237	159	187	794
	영천시	648	883	568	635	177	2,911
	울릉군	-134	4	115	71	91	147
	울진군	166	170	168	149	216	869
	의성군	358	413	534	593	163	2,061
	청도군	246	444	473	374	259	1,796
	청송군	225	157	200	103	157	842
경남	거창군	214	201	299	273	214	1,201
	고성군	156	336	584	191	80	1,347
	남해군	138	251	196	130	140	855
	밀양시	469	557	671	411	403	2,511
	산청군	265	395	335	370	282	1,647
	의령군	213	301	295	91	176	1,076
	창녕군	339	423	173	278	161	1,374
	하동군	-7	186	225	148	238	790
	함안군	122	222	212	96	100	752
	함양군	209	265	225	131	186	1,016
	합천군	134	300	294	234	195	1,157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20~2024년

앞서 분석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역의 최근 5년간 중·장년층 인구 유입 현황에 따르면, 광역시 자치구에서는 인구 유출이 나타나고 있으나 도 지역의 시·군에서는 대부분 꾸준한 인구 유입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2020년 이후 군 지역에서는 중·장년층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중·장년층 인구 이동의 배경을 지역별 특성과 연결해 보면, 각기 다른 유입 동기와 요인이 작용한다. 가령, 수도권 인근 지역의 경우 도시의 편리함을 유지하면서도 전원생활의 여유와 풍부한 문화적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수도권 거주자들의 이주를 이끌고 있으며, 반면 농지가 풍부한 내륙 지역 또는 해안가에 위치한 지역들은 귀농·귀어를 희망하는 중·장년층의 새로운 정착지로 선택받고 있다.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평균 건강수명의 연장으로 노인 연령 기준과 은퇴 시점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현재 50-60대 초반을 차지하는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와 비교해 건강상태, 교육수준, 경제적 여건이 모두 개선되어, 기존의 노동시장 참여 패턴과 사회활동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은퇴기에 접어들었거나 은퇴를 앞둔 고령층의 노동참여 의향을 조사한 결과, 55-60세 연령층의 83.5%가 평균 69.7세까지 계속 일하기를 원하며, 75-79세 연령층에서도 42%가 평균 81.7세까지 근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혜윤, 2025). 주목할 점은 고령자들의 계속 근로 동기가 단순히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적 필요에 그치지 않고, 건강 유지, 일을 통한 즐거움, 사회적 유대감 형성 등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다층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정혜윤, 2025).

이러한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활동적이고 경제력을 갖춘 중·장년층을 전략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애리조나 선시티(Sun City)는 3만 명 이상의 은퇴자가 거주하는 자치운영 도시로, 입주자들이 직접 도시 운영과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스(Palm Springs) 역시 고령 인구가 집중된 활력 있는 실버타운으로 자리잡았다. 이들 지역으로 이주하는 은퇴자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교육수준과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금과 자산소득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국내 지방정부도 이러한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경제력과 전문성을 갖춘 중·장년층 유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자연환경 보전, 의료인프라 확충, 중·장년 친화적 시설 투자를 통해 활동적인 중·장년층을 지역발전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각 지역은 고유한 기후, 지리적 위치,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지역별 산업구조, 교육수준별 인구이동 패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감소 시대의 지역 간 격차 해소는 단순한 인구 재분배가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접근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제5장

결론

제1절 | 요약 및 시사점

제2절 | 후속 연구방향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본격적인 인구감소시대에 진입하면서 지역 간 인구 격차 심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소멸 위험을 증가시키며 국가 균형발전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본 연구는 실증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간 인구이동 패턴을 분석하여 지역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지역 인구변화의 핵심 동인을 살펴보았다. 지역의 인구증감은 출생과 사망이라는 자연적 증감과 전입과 전출이라는 사회적 증감으로 구성된다. 지역 인구변화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의 인구증감은 합계출산율보다는 전출입이라는 사회적 증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차원에서 출산·육아지원 정책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인구 유입 촉진과 유출 방지에 초점을 둔 정책이 더욱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전출입신고서에 기반한 국내인구이동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이동 패턴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집중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구유출입 지역은 비슷한 유형끼리 군집(cluster)을 형성하는 특징을 보였는데 경기도 남부 지역은 인구 유입의 핫스팟(hot spot)을, 서울 일부 지역과 경기도 서부는 인구 유출의 콜드스팟(cold spot)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내에서도 산업구조 변화, 도시개발, 교통망 등 인프라 여건에 따라 인구이동 패턴이 차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별 인구이동 패턴을 살펴보면, 인구이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집단은 20-34세 청년층으로, 이들은 특히 시도 간 장거리 이동이 두드러진다. 청년층의 전입사유 분석에 따르면 교육과 직업이 주된 동기로 작용하며, 이는 수도권 대학 선호와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이동이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성별 차이이다. 19-24세 연령층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수도권으로 더 많이 이주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젊은 여성들이 대학 진학 단계부터 취업까지 고려한 장기적 관점에서 수도권을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수도권 지역은 젊은 여성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결과적으로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을 조기화하고 가속화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25-29세 본격적인 사회진출

시기에 수도권 이동이 가장 활발하다. 청년들은 진학과 취업을 주요 목적으로 수도권에 진입하지만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단순히 경제적 요인만이 아니라 문화 인프라, 각종 서비스의 불균형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문화적 접근성과 편의성, 질 높은 정주 여건이 청년들의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에서의 계속 거주의향을 살펴보기 위해 2024년 국민 미래인식·가치관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전국 만 15세 이상 14,397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면, 지역을 떠나려는 인구는 응답자 특성에 따라 고르게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나이가 젊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도 지역 거주자일수록 계속 거주 의향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광역시가 아닌 도 지역의 젊은 청년층과 고학력자들이 상대적으로 지역을 떠나려는 경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선택적 인구 유출은 지역사회에 심각한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즉, 지역은 인재 유출과 경제적 침체라는 이중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며, 특히 지역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인력과 소비주체인 젊은 층의 이탈은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지역 간 기회의 격차가 고착화되면서 사회문제로 발전할 위험성이 크다.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 계속 거주의향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강원특별자치도(28.9%), 대구광역시(38.5%), 경상남도(46.5%) 등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는 청년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계속 거주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한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청년층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작은 도시들이 대도시 수준의 조건을 갖추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거점도시별로 특화된 분야에 대규모 인프라를 집중 투자하고 도심 지역에 지식산업을 집적시켜 혁신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접근이다.

동시에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와 안전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실증 분석 결과, 사회적 네트워크의 규모와 안전감이 지역주민의 계속 거주 의향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물리적 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이 효과적인 정착 정책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 지정 89개의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출입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청년층 유출이 발생하지만 중장년층의 유입이 증가하는 지역들이 확인되었다. 이는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청년인구 유입에만 매몰되지 않고 지역의 맥락을 고려한 다양한 연령대별 인구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고령화 시대에 경제력과 활력을 갖춘 중·장년층이 많은 지역은 충분히 활기를 떨 수 있으며, 고령

인구를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닌 실버산업과 지역경제의 적극적 소비자이자 잠재적 경제활동인구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요구된다. 실제로 현재의 고령인구는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고, 생계유지와 경제적 안정을 위해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희망하며, 나아가 일을 통해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고자 한다(정혜윤, 2025). 따라서 고령인구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구감소시대의 지역 간 격차 해소는 단순한 인구 재분배 문제를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 통합을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핵심 과제이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청년층 정착 지원과 중·장년층 유입 활용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것이 인구위기 극복의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다.

제2절

후속 연구방향

본 연구는 인구감소시대라는 전환적 시기에 적합한 지역 전략 수립을 위해 인구이동 패턴을 분석하여 전반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존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정책의 실증적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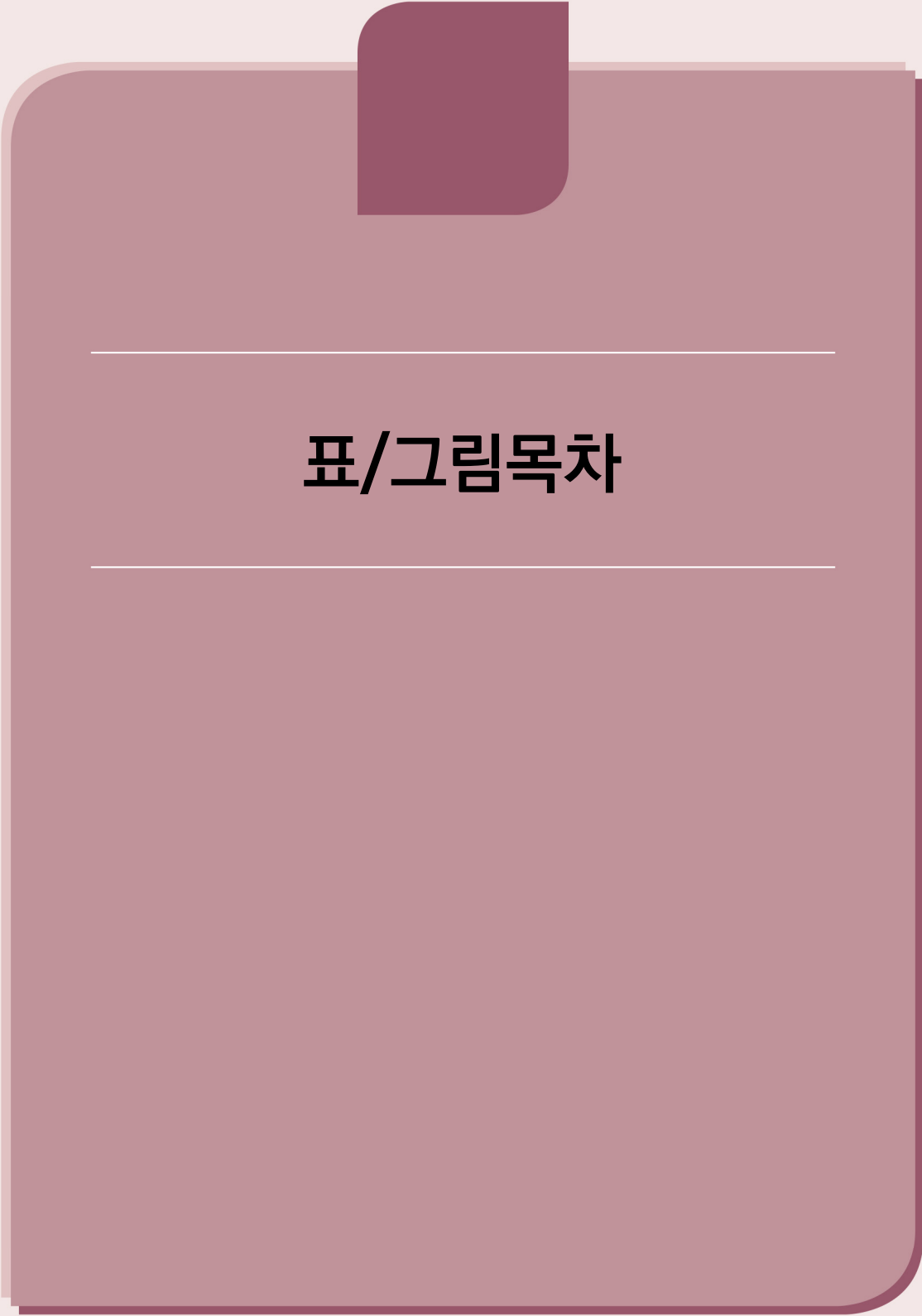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인구유지 또는 유입을 전제로 하여 인구감소와 지역 쇠퇴로 인해 지속적 활용이 어려운 용도의 인프라에 투자하는 비효율성을 보이거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유사하거나 중복적인 사업에 투자하는 관행을 반복해왔다.

또한 기존의 지역인구 감소 대응은 지역 간 제로섬(zero sum) 인구 유치 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자원 배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 이른바 ‘나눠주기식’ 자원배분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따라서 과거 지역발전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통해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추진된 산업단지, 혁신도시 등 기존 정책들이 인구, 일자리, 지역발전 측면에서 어떤 효과성을 보였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저성장과 인구감소가 새로운 표준으로 등장하는 뉴노멀 시대에 실효성 있는 지역 전략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는 인구감소시대에 모든 지역을 살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한계로 인식하면서도, 그렇다고 모든 지역민이 그 지역을 떠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균형적 관점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 애착을 느끼며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방향을 지역사례 연구를 통해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구감소시대 생활 인프라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모든 인구감소지역과 소멸위험지역의 인구를 유지하거나 반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차등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인구감소시대에 효율적인 국토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장기적 시계의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그림목차

[표 3-1] 시군구별 합계출산율 순위(상위, 하위)	24
[표 3-2] 시군구별 20-24세 순이동률 순위(상위, 하위)	32
[표 3-3] 시군구별 25-29세 순이동률 순위(상위, 하위)	33
[표 3-4]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입연령별 순이동자수	34
[표 4-1] 지역(전국 시군구) 인구 변수들 간 상관관계	39
[표 4-2] 전출 시도별 수도권 전입 청년 인구	41
[표 4-3]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전입 청년 인구 이동사유	43
[표 4-4] 본 분석의 측정 변수 설명	45
[표 4-5] 현 시도에서의 거주이향 영향요인 분석 결과	48
[표 4-6]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인구감소지역 50-64세 순이동	51
[표 4-7]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 50-64세 순이동	51
[표 4-8] 충청북도, 충청남도 인구감소지역 50-64세 순이동	52
[표 4-9]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의 인구감소지역 50-64세 순이동	53
[표 4-10]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인구감소지역 50-64세 순이동	54

[그림 2-1] 연도별 전국 이동규모 변화	9
[그림 2-2] 전입사유 (2014, 2024)	10
[그림 2-3] 연령별 시도내 시군구간 이동(2004, 2014, 2024)	11
[그림 2-4] 연령별 시도간 인구이동(2004, 2014, 2024)	12
[그림 2-5] 연령별 시군구, 시도간 이동률 비교(2024)	13
[그림 2-6] 연령별 전입사유(2024)	13
[그림 2-7] 시군구별 2020년 대비 2024년 인구증가율	14
[그림 2-8] 시군구별 순이동률(2024년)	15
[그림 2-9] 최근 5개년 평균 순유입인구	16
[그림 2-10] 최근 5개년 평균 순유입인구 LISA Cluster Map	18
[그림 2-1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비율	19
[그림 2-1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GRDP 비율	20
[그림 3-1] 시도별 합계출산율(2024)	23
[그림 3-2] 시군구 합계출산율(2024년)	25
[그림 3-3] 시군구 고령인구비율	26
[그림 3-4] 시군구 노년부양비(2023년)	27
[그림 3-5] 시군구 청년인구비율(2024년)	29
[그림 3-6] 20-24세 시도간 이동 네트워크	30
[그림 3-7] 25-29세 시도간 이동 네트워크	31
[그림 3-8] 30-34세 시도간 이동 네트워크	31
[그림 3-9] 20대 전입 사유(전국, 서울시, 경기도)	35
[그림 4-1] 수도권 전입 청년의 전출 시도(연령별, 성별)	42
[그림 4-2] 수도권 전입 청년인구(2020, 2024)	44
[그림 4-3] 5년 후 현재 시도에서의 거주의향	49
[그림 4-4]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50



참고문헌

1. 문헌 자료
2. 온라인 자료
3. 보도자료 및 신문기사

참 고 문 헌

1. 문헌 자료

- 박동하 외(2022),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 특성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안태훈(2024),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평가”, 국회예산정책처.
- 이상림, 최인선(2023), “국내인구이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 보건사회연구원.
- 이상일, 조대현(2024), “우리나라 인구이동 데이터의 다양성과 상호보완성에 관한 연구: 주민등록과 등록센서스 데이터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제59권 제4호: 487-504.
- 이희연(2014), “국내 인구이동의 특성과 유형”, 한국의 사회동향 2014, pp.43-51, 통계청 통계개발원
- 정민수, 김의정, 이현서, 홍성주, 이동렬(2023),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BOK 이슈노트, 한국은행.
- 정혜윤(2025), “정년연장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중고령 노동시장 정책의 재구성”, 국회미래연구원 연구보고서 25-1호, 국회미래연구원.
- 최예슬(2022),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화 실태와 유출인구 특성 분석”, 국토연구원.
- 통계청(2023),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정보보고서, 통계청.

2. 온라인 자료

- 통계청(2000-2024), 국내인구이동통계(<https://kosis.kr/index/index.do>)
- 통계청(2010, 2015, 2020), 인구총조사(<https://kosis.kr/index/index.do>)
- 행정안전부(2024), 주민등록인구현황(<https://kosis.kr/index/index.do>)
- 행정안전부 웹페이지(<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3. 보도자료 및 신문기사

- “공공기관 이전 반짝효과, 다시 시작된 지방소멸”, 한국경제신문, 2024.11.22, A2.

인구감소시대 지역간 인구이동 패턴과 대응전략

발행일 2025년 7월
발행인 김기식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전 화 02)786-2190
팩 스 02)786-3977
홈페이지 www.nafi.re.kr
인쇄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 (02-761-0031)

© 2025 국회미래연구원

ISBN 979-11-94650-26-3 (93310)

